국제기구 보고서요약

2021 No.4

OECD Going for Growth 2021

2021.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OECD
Going for
Growth
2021

본 보고서는 OECD에서 발표(2021.4.14)한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21: Going for Growth: Shaping a Vibrant Recovery"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연구진

- 윤성주 센터장
- 김은숙 선임연구원
- 이정은 선임연구원
- 배경진 위촉연구원

Ⅰ. 보다 강력하며 회복력 있고, 공평하면서 지속가능한 COVID-19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정책 ····· 1

1.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정책 ····· 1
가. 도입 ····· 1
나. 정부 정책의 단계적 조치(Sequencing), 정책 간 상생(Synergy), 정책 간 상쇄(trade-offs) 및 조건부 시행(state contingency)을 고려한 구조개혁 패키지 ····· 3
2.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 5
가. 의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개혁의 중요성 증가 ····· 5
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회복을 통한 미래 위험 완화 ····· 6
다. 공공 거버넌스 및 법과 제도(rule of law)를 통한 신뢰 향상 ····· 7
라. 인프라를 통한 회복력 및 복지 향상 ····· 8
3. 재배분 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 8
가. 재배분에 대한 장애물 제거 ····· 9
나. 녹색 회복의 촉진 ····· 12
4. 회복 및 전환기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 ····· 15
가. 저소득 근로자 보호 및 고용가능성 향상 ····· 15
나. 교육시스템 개혁의 필요성 ····· 18

Ⅱ. 국제협력을 위한 우선순위 ····· 20

1. 보건: 국제협력 개선 ····· 20
2. 기후변화: 탄소중립(net-zero) 추진 ····· 22
3. 무역: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기반의 무역 시스템 ····· 24
4. 과세: 경제 디지털화에 대한 세금 ····· 26

Ⅲ. 국가별 과제(Country note) ····· 28

1. 호주 ····· 28
2. 캐나다 ····· 30
3. 중국 ····· 33
4. EU ····· 36
5. 프랑스 ····· 39
6. 독일 ····· 42
7. 일본 ····· 45
8. 한국 ····· 48
9. 영국 ····· 51
10. 미국 ····· 54

참고문헌 ····· 57

Ⅰ. 보다 강력하며 회복력 있고, 공평하면서 지속가능한 COVID-19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정책

1.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정책

□ 팬데믹 발생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기존의 구조적 약점이 증폭된 상황으로, 성장을 재설정(reset)하기 위한 결정적인 정책 조치가 시급함

○ 팬데믹에 대비하지 못한 의료제도, 비효율적인 사회안전망, 제한된 디지털 기술 등은 팬데믹 이전의 성장, 생산성 증가의 둔화, 인구 고령화,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미침

- 수년간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압박을 받던 의료시스템은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비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하여 소득손실로 빈곤위험에 노출됨
- 특히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의 제한이 분명해졌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함

○ COVID-19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된 상황에서 성장 재설정을 위한 결정적인 정책 조치가 시급함

- 실업과 파산의 증가는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봉쇄(lockdown)는 교육 격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
-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트렌드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업무 조직, 교육, 소비패턴 측면에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회복력에 대한 집중이 강화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해짐

가. 도입

□ Going for Growth 2021에서는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회복 방법에 대하여 회복력 제고(building resilience), 재배분 촉진(facilitating reallocation), 전환기의 근로자 지원(Supporting people in transitions)의 세 가지 방면으로 국가별 조언을 제공

❍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회복력은 위험을 감지 및 방지하고 위기 시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며, 위기 후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구조적 정책을 통해 충격에 대한 1차 방어선(의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주요 인프라)을 개선하고,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및 기술 변화 등을 통해 장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민간 부문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음

❍ (재배분 촉진 및 생산성 향상) 재배분 촉진은 기업이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친환경적이 되도록 정책 장벽을 제거하여 기업 내부와 기업 간 자원 재배분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

❍ (전환기 근로자 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한 방해물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위기 시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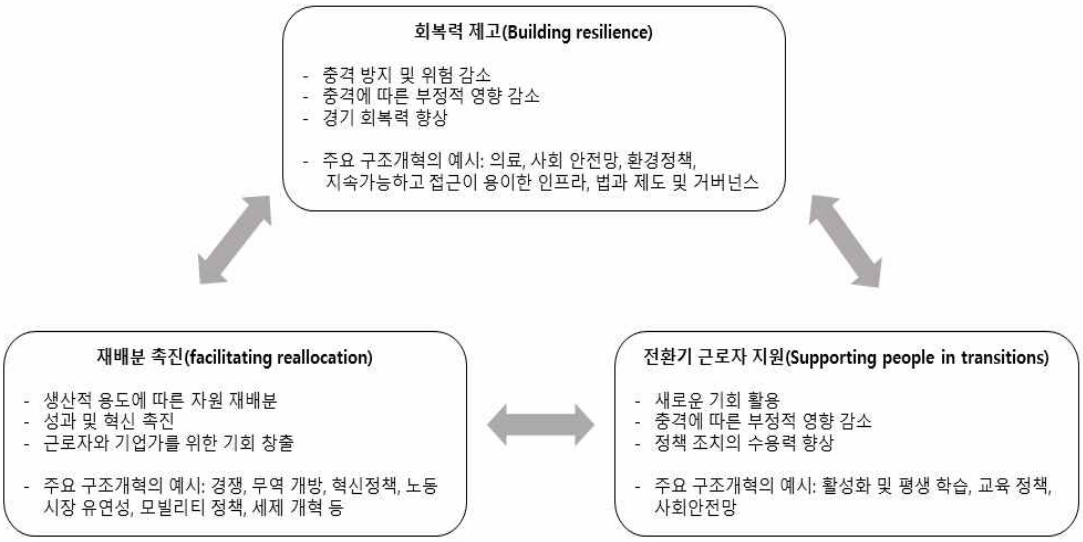
- 이러한 정책에는 기술 및 교육, 활성화 및 재교육 계획, 사회 안전망이 포함되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수반할 필요

❑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정책 우선순위에는 주로 회복력 집중 강화를 반영하였으며,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모두에서 특히 포용성에 중점을 두었고 사회안전망과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함

❍ 회복을 위한 정책이 환경 및 기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모두에서 환경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

❍ 신흥시장국에서는 법과 제도(rule of law), 교육 및 기술, 노동 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된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증가

[그림 Ⅰ-1]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정책



자료: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21 Going for Growth: Shaping a Vibrant Recovery*, 2021, Figure 1.2 재구성

나. 정부 정책의 단계적 조치(Sequencing), 정책 간 상생(Synergy), 정책 간 상쇄(trade-offs) 및 조건부 시행(state contingency)을 고려한 구조개혁 패키지

□ (위기로부터의 회복 촉진) 일부 구조적 정책은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부양책의 효과를 향상시키며, 이러한 구조적 정책을 조기 시행하면 회복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공공인프라 투자는 수요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수익이 높은 프로젝트를 조기 시행할 필요

  • 저개발 지역의 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기회 및 투자의 평등을 개선할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 등

❍ 교육, 법과 제도, 인프라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사람들의 장래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은 효과가 실현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빈곤가구의 경제적 포용을 다루는 정책(예: 의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개혁)은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회복력 개선을 위한 신속한 조치는 백신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음

□ (사회적 피해 방지) 건강, 빈곤 등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될 필요

❍ 교육 개혁은 거시경제적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의료서비스, 빈곤 감소, 회복력을 지원하며, 교육 개혁을 통해 팬데믹 관련 학업 손실을 보상할 필요

- 교육개혁은 원격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백스톱 옵션(backstop option)이 되도록 함으로써 팬데믹과 관련된 학업 손실을 보상할 필요

❍ 팬데믹이 기존 조건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방적 의료는 회복력을 개선할 수 있음

❍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ies) 및 기술 강화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지원하고 고용시장(job market) 재진입을 가속화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킴

□ (점진적 또는 조건부(state-contingent) 시행)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개혁들은 점진적으로 시행되거나 경제 상황과 연계해서 시행할 필요

❍ 실업급여제도에서의 구직 조건의 도입 또는 강화는 구직 장려를 위해 중요하지만, 초기 회복단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개혁을 시행할 필요

- 실엽급여제도의 자격 기준이 엄격해지면 급여 수급자가 노동력에서 이탈할 수 있으며 이는 빈곤 위험 증가, 신뢰 약화,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
- 엄격한 실업급여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s)과 직업 대 직업 전환을 돕는 공공 고용 서비스로 보완될 필요

❍ 회복에 대한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고려하여 보다 성장 친화적인 조세구조를 위한 개혁을 시행할 필요

- 이러한 개혁에는 소득세 삭감, 소비세, 재산세, 환경세를 통한 세입 확충, 과세기반 확대를 포함
- 조세구조 개혁은 소비와 포용에 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인 소득세 인하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감세가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회복이 가능할 때만 증세를 고려해야 함[1)]

1) OECD (2020f), COVID-19 and the low carbon transition: Impacts and possible policy response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 회복단계 후반에 탄소세 사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조기 약속은 기업에게 새로운 세금을 즉각적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정책관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선제적 지침을 제공하여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및 혁신을 장려

- 재정지속가능성 및 환경 과세 신호에 대한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세를 계획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하며, 분배(distributional) 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함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원 재배분에 도움이 되지만, 경제가 약화된 시기에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을 완화하는 것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음

- 이는 조기회복 단계와 재교육 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서 특히 해로울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신규 채용자의 EPL을 완화하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위기로부터 회복이 확고하게 진행될 경우, 위기 이후 국가들에게 전반적인 재정 프레임워크와 조세 및 지출정책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장기적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정정책의 혼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재평가는 위기로 인해 제기된 과제와 지속적인 구조적 추세와 관련된 과제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

2.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가. 의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개혁의 중요성 증가

□ (의료서비스) COVID-19는 취약한 회복력, 의료종사자 부족, 예방 부족, 건강에 대한 사회적 배경의 강한 영향,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 문제 등 많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약점을 부각시킴

❍ 10개국의 회복 패키지에서 의료서비스가 우선순위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의료서비스의 보장범위를 영구적으로 늘리고 사회구성원의 동일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선정

❍ 팬데믹은 환경 및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과 예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COVID-19의 사망률은 사회적 배경이 건강에 미치는 강한 영향을

나타냄

❍ COVID-19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대규모 글로벌 건강 문제에 대한 국내 정책 대응은 국경을 초월한 확산 억제, 의료시스템의 회복력 개선, R&D로 인한 파급 효과 활용, 의료 재료, 장비 및 백신의 배포 조정 등 국제협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회안전망) 팬데믹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모두에서 사회안전망의 격차를 부각시켰으며, 회복력 향상을 위해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고 신속한 업무 복귀를 촉진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

❍ 실업급여제도는 실직에 대한 소득보호를 제공하는 핵심수단이지만 일부 근로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비공식 근로자 및 비정규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기존 사회적 보호(예: 유급 병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실직으로 인해 빈곤에 빠질 수 있음

❍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였고, 의료서비스 적용범위, 실업급여, 최저 소득 급여(minimum-income benefits), 임금보조금을 자영업자,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 이중적인 노동시장에서의 팬데믹과 같은 충격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

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회복을 통한 미래 위험 완화

❑ 팬데믹은 기후변화, 오염 및 이와 관련된 건강 비용, 생물 다양성 손실, 물 부족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Going for Growth의 정책 권고 사항에서도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가 현저히 증가

❍ OECD 17개 회원국과 EU에서는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선정,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특히 회복 초기에 “녹색” 공공투자와 보조금을 우선해야 함

❍ OECD 14개 회원국은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선제 지침’이 될

수 있는 향후 환경세 인상에 대한 약속을 제시

- 일부 국가에서는 농업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혁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결과를 장려

❍ 기후변화 완화는 국가 간 조정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환경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에 의해 설정된 새로운 인센티브에 따라 자원을 재배분할 필요

- 국경을 넘는 누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정책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변화 완화는 국가 간 조정이 필요

다. 공공 거버넌스 및 법과 제도(rule of law)를 통한 신뢰 향상

□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손상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거버넌스가 더욱 중요해짐

❍ 팬데믹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증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은 백신 출시, 바이러스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건강 조치 및 경제 회복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2)]

❍ 보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 법과 제도 및 우수한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의 신뢰에 대한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며[3)], 생산성 및 개혁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4)]

- 대중의 신뢰는 규제 및 조세제도를 보다 잘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5)], 부패, 약한 법적 책임성, 법적 지연을 통해 나타나는 공공 신뢰의 부재는 희소한 자원을 가장 생산적인 사용에서 벗어나게 하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입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의 일부였기 때문에, 팬데믹은 국영기업(SOE)의 공공 거버넌스 개선에 긴급성을 더함[6)]

---

2) OECD (2020p), "Transparency, communication and trust: The role of public communication in responding to the wave of disinformation about the new Coronaviru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3) Egert B. (2017), "Regulation, institutions and productivity: New macroeconomic evidence from OCE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354, OECD Publishing, Paris.
4) OECD (2017a),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to the wave of disinformation about the new Coronaviru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5) OECD (2013),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6) Abate et al. 2020, "The COVID-19 crisis and state ownership in the economy: Issues and policy considerations, OECD COVID-HUB Policy Brief", OECD Publishing, Paris.

라. 인프라를 통한 회복력 및 복지 향상

□ 팬데믹은 회복력을 위한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인프라 투자는 중기적으로 경제적 성과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

○ GDP 대비 공공자본은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거나 하락하였고 여러 OECD 국가에서 인프라 품질이 악화되었으며, 녹색 전환을 위해서 청정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

○ 공공 인프라 투자는 특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s)가 높을 때 효과적인 단기 수요 부양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7], 인프라 투자의 총 이익은 프로젝트의 선택, 계획, 제공, 관리에 따라 상이함

○ 모든 국가의 농촌지역에는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물리적 인프라는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포용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

○ 주택정책 개혁은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은 저소득층 가구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지리적 또는 직업 이동성 장벽을 제거하는 주택 정책 개혁은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사회 경제적 사다리(socioeconomic ladder)[8]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여 포용적 성장을 강화할 수 있음
- 주택가격상승은 저소득층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주택은 가계 부채를 증가시켜 거시경제적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3. 재배분 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와 디지털화, 녹색 전환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 가운데, 현저한 재배분 능력 저하 해결을 위한 현재 OECD 국가의 구조적 정책 설정에 의문이 제기됨

○ 팬데믹으로 인한 조직 변화에 대한 적응, 디지털화 수용, 고령화 대응, 환경 목표 진전에 필요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회복의 속도가 상이할 수

7) Schwartz et al (2020), Well Spent: How Strong Infrastructure Governance Can End Waste in Public Invest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8) Judge (2019), Social renting: a working hypothesis, Resolution Foundation, accessed on 15 January 2021.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 시행, 상업화하고 최종적으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모로 생산하기 위해 보완적인 유형 자원(예: 부족한 자본, 노동 및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용이성이 핵심 문제로 부상

❍ 재배분을 위한 정책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나 단기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 배치전환을 고려한 근로자 지원 정책을 수반할 필요

가. 재배분에 대한 장애물 제거

❑ (진입 장벽 감소)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투자 및 고용 이익이 빠르게 실현되면서 기업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팬데믹과 녹색 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조직 변화 수용에 기여할 수 있음

❍ 많은 국가에서 경쟁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은 팬데믹으로 인한 활동 감소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엄격한 라이선싱 및 허가 시스템 또한 많은 국가의 기업들에게 행정 부담과 규제의 복잡성을 야기

❍ 억눌린 수요가 많고 진입 비용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 투자 및 고용 이익이 빠르게 실현되면서 기업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9], 기업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기업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남유럽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경제 전반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개선하고 기업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음[10]
- 서비스 부문의 진입 장벽에 대한 개혁은 호주, 미국 등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

❍ 신생기업이 급진적인 기술 혁신 및 조직 혁신을 시행하는 데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팬데믹과 녹색 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조직 변화를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9) Forni, L., A. Gerali and M. Pisani (2010), "Macroeconomic Effects of Greater Competition in the Service Sector: the case of Italy", Macroeconomic Dynamics, pp. 1-32.
10) Ciriaci, D. (2014), "Business Dynamics and Red Tape Barriers", Economic Paper European Commission, Vol. 532.

❑ (무역 장벽 제거) 다자간 협력은 낮은 무역 장벽의 이점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고통 받는 근로자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과 결합될 필요

❍ 주요 무역 협정과 최근 몇 년간의 무역 촉진 조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왜곡된 무역 장벽이 존재하며, 주요국들 간의 무역 긴장은 정책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

❍ 다자간 협력은 낮은 무역 장벽의 이점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는 회복된 시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고용을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식 이전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음

❑ (디지털 시대를 위한 기업 간 경쟁 정책 조정) 경쟁 정책 강화는 제품시장 규제 분야에서 자주 권고되는 사항 중 하나로, 팬데믹은 디지털 시대를 위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

❍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시장으로의 이동 가속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이 평준화될 수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승자독식 역학관계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기업에 데이터 재산권을 할당하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높은 전환 비용과 기존 기업이 데이터를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어 알고리즘을 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이 필요한 신생기업의 경쟁을 억제할 수 있음

❍ 정부는 대형 기술 회사의 신규 인수와 대기업 합병, 디지털 기업의 반경쟁 행위, 시장의 수요 측면 특성, 후속 혁신에 대한 잠재적 피해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노동 이동성 장벽 제거) 지리적 또는 일자리 이동에 대한 장벽을 낮추면 경기 침체기의 고용 증가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회복 초기단계에서는 고용보호법(EPL) 완화에 주의할 필요

❍ 주거 이동성과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개혁은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 완화에 매우 중요하며, 엄격한 직업 면허 및 국내 제도의 세분화를 완화하는 것은 일자리 이동성 및 확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하, 엄격한 임대 규제 완화, 주택공급 마찰 감소 등

주거 이동성과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개혁은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 완화에 매우 중요

❍ 회복 초기단계에서는 고용보호법(EPL) 완화에 주의해야 하며, 주택 시장 및 직업 면허에 대한 개혁이 우선될 필요

- 고용보호법 완화는 노동시장 조정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에 자원을 전달할 수 있지만 즉각적인 해고를 유발할 경우 경기 침체기에 경기 후퇴가 나타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용을 점차 증가시킬 것이며, 주택 시장 및 직업 면허에 대한 개혁을 우선시할 필요

□ (파산제도 개혁 및 금융에 대한 접근 촉진) 파산제도의 개혁은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금융의 출처를 다각화하는 개혁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파산제도 개혁은 생산성 향상을 방해하는 좀비 기업의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자본 재배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OECD 사례에 의하면 파산제도 개혁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파산제도 개혁은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의 국가에서 5대 우선 순위 중 하나

❍ 파산제도 개혁은 기업의 자본구조 재조정과 채무과잉 완화를 위한 자기자본 조달을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유망하고 생산적인 기업의 청산을 줄이고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시기적절한 구조조정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채무 구조조정의 유예, 부실 거래 방지 조항의 중단 등 기타 위기로 인한 파산제도의 변화가 영구적으로 재배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새로운 지식에 대한 투자가 자기자본 조달에 더 의존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 부양책 철회에 따라 은행 대출에서 시장 기반 채무 및 자기자본 조달로 기업금융의 출처를 다각화하는 개혁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나. 녹색 회복의 촉진

□ (환경정책 신호 설정) 장기적인 성장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가격 신호가 필요하며, 강력한 환경 정책은 총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인센티브를 환경 지속가능성과 연계시킬 수 있음

❍ 장기적인 성장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가격 신호가 필요하나, 현재 OECD 대부분 국가들의 배출권 가격이 낮게 책정된 상태

❍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탄소세 부과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사전에 발표하는 것은 기업에 즉각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선제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정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녹색 투자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

- 또한 이는 회복단계에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상당 규모의 배출 감소를 약속할 수 있음

❍ 강력한 환경정책은 총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인센티브를 환경지속가능성과 연계시킬 수 있음

- 강력한 환경정책은 생산적인 기업에게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축소 및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총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정책 입안자는 장기적으로 녹색 회복 및 전환을 설계할 때 재배분에 대한 정책 결정의 영향, 보완 정책의 중요성, 국경 간 누출 최소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패키지 설계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

□ (재배분을 고려한 환경정책 설계) 오염 활동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양책은 오염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과 재배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시장 기반 환경정책은 재배분을 지원할 수 있음

❍ 거시경제 부양책은 오염 산업의 구조 조정을 늦출 수 있고 오염이 심한 좀비 기업이 재배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오염 활동이나 탄소 집약적인 기술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

❍ 보다 강력한 시장 기반 환경 정책 엄격성(EPS)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자본 재

배분 강화와 관련이 있듯이, 일부 환경정책은 재배분을 지원할 수 있음

- 이는 시장 기반 정책이 기업의 비용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장 큰 배출 감소를 달성하고, 관리 비용 최소화와 경쟁 유지를 향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일치함

□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보완적인 구조적 정책) 녹색 전환을 위해서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 지식, 기술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인 제약을 받는 기업의 배출 강도가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시장 구조를 신속히 업데이트할 필요

❍ 시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배출 감소 가능성이 가장 큰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지향(Technology-push)' 정책과 녹색상품의 수요를 증가 시켜 녹색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장견인(Market-pull)' 정책 등 녹색 R&D에 대한 정책 지원 사례도 있음

- 기술지향 정책의 예시로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간헐적 에너지원을 위한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직접 보조금, 세액 공제, 프로젝트 보조금 및 대출 등이 있음
- 시장견인 정책의 예시로는 관세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등이 있음

❍ 숙련 근로자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보다 용이하게 재배분 될 때 혁신 정책 지원 효과가 향상될 수 있으며, 기술 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은 부족한 기술을 녹색 기업에 재배분할 수 있음

□ (국경을 넘어선 배출량 누출 방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 유동적인 생산을 배경으로 환경정책의 엄격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배출량 누출의 문제점이 주요 과제로 부상

❍ 배출량 누출은 기후완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기후 정책 실행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약화시킴

❍ 배출 집약적인 무역 산업의 기업들에게 국내 생산 유지를 보상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상당한 과잉보상을 초래할 수 있음

❍ 탄소국경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s)은 누출 해결을 위한 덜 왜곡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의 시행이 '녹색 보호주의'를 위한 도구로 인식될 경우 국가 간 무역 및 환경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역협정과의 호환성 검토 등을 포함한 신중한 설계가 필요

- 탄소국경조정은 수입물에 포함된 탄소 가격을 책정하여 탄소 누출 및 경쟁 우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 탄소국경조정은 무역협정과의 호환성 검토, 대상이 되는 배출 유형, 탄소 함유량 추정, 수출 리베이트 현황 등을 포함한 신중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

□ (녹색 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녹색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시행은 사회적 수용성에 의존

❍ 녹색 전환은 순 긍정적(net positive)인 보건 및 경제적 효과를 수반하지만[11] 전환 비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특정 인풋 및 아웃풋 금지로 인한 일방적 조치 또는 직접적인 활동 중단의 경우,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광업 및 화석연료,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등 특정 부문의 고용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12]
- 오염 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 부문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부문에서의 파급 효과를 통한 근로자의 소득 손실로 생활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13]
- 저숙련 근로자는 업무가 자동화로 인해 대체되고 새로운 녹색 일자리의 기술 요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고용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14]
- 저소득 가구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전기 및 난방비용의 상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활비용 우려 제기[15]

---

11) Vona, F., G. Marin, D. Consoli and D. Popp. (2018),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Green Skills: An Empirical Explor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sts, Vol. 5/4, pp. 713-753, http://dx.doi.org/10.1086/698859.

12) Chateau, J., R. Bibas and E. Lanzi (2018), "Impacts of Green Growth Policies on Labour Markets and Wage Income Distribution: A General Equilibrium Application to Climate and Energy Policies",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13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a3696f4-en.

13) Walker, R. (2011),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Labor Reallocation: Evidence from the Clean Air Act",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1/3, pp. 442-447, http://dx.doi.org/10.1257/aer.101.3.442

14) Marin, G. and F. Vona (2019), "Climate policies and skill-biased employment dynamics: Evidence from EU countrie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98, pp. 1022-53, http://dx.doi.org/10.1016/j.jeem.2019.102253.

❍ 환경 정책 강화와 관련하여 정책의 공정성 인식 부족, 오염 집약적인 기업들의 녹색 정책 반대 주장 등 많은 저항이 존재

- 환경 정책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이 심해질 경우 정책의 공정성[16]을 대중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17]
- 이러한 인식을 이용하여 일부 오염 집약적인 기업은 녹색 정책에 반대하는 '일자리 죽이기' 주장을 진전시키거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음

4. 회복 및 전환기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

❑ 회복세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

❍ 재배분은 기회를 창출하지만 특히 숙련도가 낮은 사람과 이미 노동시장의 한계에 있는 사람에게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 전환 중 소득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

가. 저소득 근로자 보호 및 고용가능성 향상

❑ (저소득 근로자 보호) 저소득 근로자와 필수적인 활동(essential activities)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위기에 대해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제기

❍ 일부 신흥시장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 과제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팬데믹과 지속적인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 임금 문제가 대두됨

- 일부 신흥시장국(터키,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의 정책 과제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부 저숙련 근로자들이 공식 노동시장에서 배제되

15) Levinson, A. (2019), "Energy Efficiency Standards Are More Regressive Than Energy Tax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sts, Vol. 6, No. S1.
16) Clayton, S. (2018), "The Role of Perceived Justice, Political Ideology, and individual or Collective Framing in Support for Environmental policies", Social Justice Research, Vol. 31, pp. 219-237.
17) Douenne, T. and A. Fabre (2020), "Yellow Vests, Pessimistic Beliefs, and Carbon Tax Aversion".

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는 것

- 일부 선진국에서는 팬데믹과 지속적인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 임금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

❍ 세제혜택에서 근로 및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경우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 분배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18], 많은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할 필요

-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는 포괄적인 회복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고용가능성 향상) COVID-19로 인한 지원 조치가 철회될 경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LMPs)은 근로자들의 숙련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업 진입 장벽 완화 정책과 결합 시 실직한 근로자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음

❍ COVID-19로 인한 지원 조치가 철회될 경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LMPs)은 실업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의 숙련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17개 국가에서 ALMPs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 재교육(reskilling)은 팬데믹과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시장 조정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이 낮은 저숙련 근로자 및 취약 계층 사이에서 디지털 역량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그림 Ⅰ-2], Panel A 참고)
- 네덜란드에서는 숙련도 향상을 조건으로 고용유지제도(JRS, Job Retention Schemes)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훈련 및 개발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19], 프랑스, 독일에서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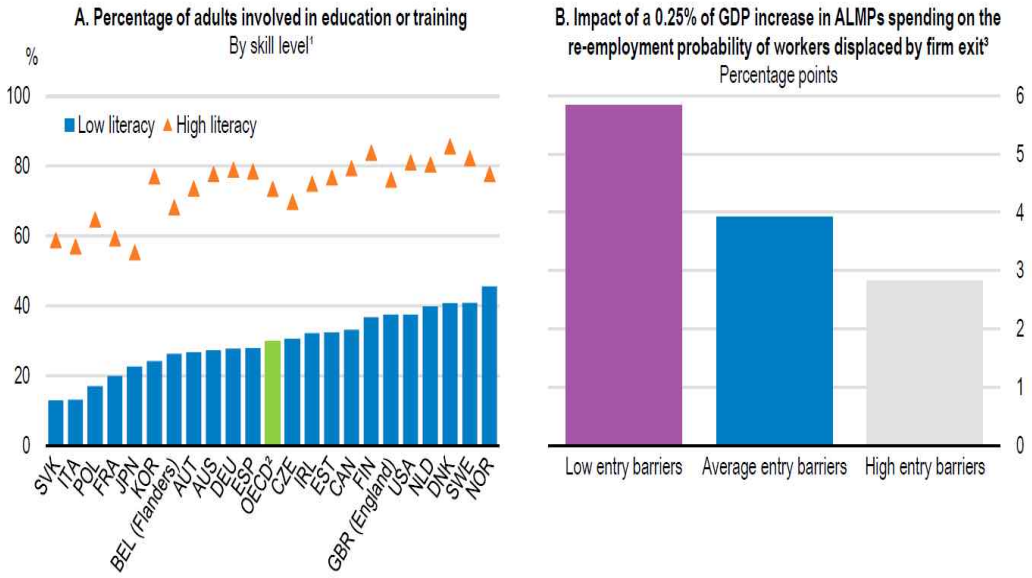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LMPs)은 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혁과 결합할 때, 실직한 근로자들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GDP 대비 ALMPs 지출이 0.25% 증가하면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 실직 근로자의

18) OECD (2015b), Economic Policy Reforms 2015: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19) 고용유지제도(JRS)는 많은 OECD 국가에서 COVID-19 위기로 인한 고용 및 사회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정책 도구 중 하나임. 네덜란드에서는 2020년 6월부터 고용유지제도 관련 지원을 신청하는 고용주는 적극적으로 훈련을 장려해야 하며, 정부는 온라인 훈련 및 개발 과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시행. 출처: OECD, Job retention scheme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nd beyond, 2020.10.12.

재고용 확률이 6%p 증가하나,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 3%p 미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Ⅰ-2], Panel B참고)

[그림 Ⅰ-2]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정책 고려 사항



주: 1. Low literacy는 레벨 1 이하(성인은 짧은 글을 읽을 수 있음)를 의미하고, High literacy는 OECD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복잡하거나 긴 연속형, 비연속형, 혼합형, 또는 다중형 글에서 정보를 통합, 해석, 합성하기 위해 최소한 다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벨 4/5수준을 의미. 성인은 25-65세를 의미하며, 훈련은 공식 및 비공식 훈련을 모두 의미함.

2. OECD 평균은 차트에 제시된 국가들을 포함함.

3. Panel B의 막대는 다음에 해당하는 세 가지 수준의 진입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GDP 대비 ALMPs)에 대한 지출이 0.25% 증가할 경우 재고용 확률에 대한 %p 영향을 나타냄; i) 표본 기간 동안 성과가 가장 우수한 두 국가(보라색 막대); ii) 표본 기간 동안 관측된 평균 수준(파란색 막대); iii) 표본 기간 동안 성과가 가장 낮은 두 국가(회색 막대)

자료: Panel A: OECD calculations based on OECD (2017),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ll: Overcoming Inequality throughout the Life Course, t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nel B: Andrews and Saia (2016);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21 Going for Growth: Shaping a Vibrant Recovery*, 2021, Figure 1.10

❍ 평생 학습(life-long learning) 향상은 16개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 및 인지능력 수준이 낮은 사람을 학습에 참여시키는 것이 정책 과제

-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중간 및 고임금 성인의 57%가 성인 학습에 참여하는 반면, 저임금 성인의 경우 35%만 성인 학습에 참여[20)]
- 정책과제는 교육 및 인지능력 수준이 낮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높을 수 있음

20) OECD (2019d), OECD Skills Outlook 2019: Thriving in a Digital World, OECD Publishing, Paris.

나. 교육시스템 개혁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휴교가 절정이던 시기에 전 세계 취학 연령 아동 및 청소년의 90%가 휴교로 인한 영향을 받았으며, 학업 손실(a lost school year)은 생애 소득에서 7~10%의 손실을 나타낼 수 있음

○ 2020년 4월 전 세계적인 휴교가 절정이던 시기에 전 세계 취학 연령 아동 및 청소년의 90%에 해당하는 15억 명이 넘는 학생이 휴교로 인한 영향을 받았음

○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학업 손실은 생애 소득에서 7~10%의 손실을 나타낼 수 있으며[21],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학교 휴교가 상당한 GDP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22]

□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학습으로의 대규모 전환으로 인해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해졌으며, 모든 교육수준에서 디지털 접근 및 지식의 격차가 분명해짐

○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학습으로의 대규모 전환으로 인해 온라인 및 원격 학습을 위한 인프라 개발과 교사 및 학생의 새로운 경로 사용에 대한 능력 향상 관점에서 많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이 나타남

- 팬데믹 이전 많은 국가에서는 기술 교육 실습 통합에 대한 교사의 친숙도가 제한적이었음[23]
- 15세 학생의 9%(OECD 평균)는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며, 취약한 지역의 학교의 경우 디지털 학습에 대한 접근이 더 낮았음

○ 휴교로 인해 모든 교육수준에서 디지털 접근 및 지식의 격차가 분명해졌으며, 취약한 환경의 아이들은 학습 손실 측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원격학습은 학생들에 대해 자율성, 독립적인 학습 및 자가 모니터링 능력, 비인지적 기술 습득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그중 일부는 학교 및 교육 성취와

21) OECD (2020t), Climate Policy Leadership in an Interconnected World: What Role for Border Carbon Adjustments?, OECD Publishing, Paris.
22) Psacharopoulos et al (2020), "Lost wages: The COVID-19 Cost of school closures," Discussion Paper Series, No. 13641,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Bonn.
23) OECD (2020t), Climate Policy Leadership in an Interconnected World: What Role for Border Carbon Adjustments?, OECD Publishing, Paris.

관련이 있음[24]

- 취약한 환경의 아이들은 학업 손실 측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며[25], 따라서 이와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는 학업 손실을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4) OECD (2020t), Climate Policy Leadership in an Interconnected World: What Role for Border Carbon Adjustments?, OECD Publishing, Paris.
Cunha et al (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NBER Working Paper No. 11331, Boston.

25) Heckman, J.J., J. Stixrud and S. Urzua (200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u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urs", NBER Working Paper, No. 1200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Ⅱ. 국제협력을 위한 우선순위

1. 보건: 국제협력 개선

❑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향후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백신접종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음

❍ COVID-19 위기를 겪으면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보건 분야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됨

- 의약품, 보호장비,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별국가들의 제조 및 유통 능력이 충분치 못해 해당 품목들에 대한 높은 무역 상호의존성이 드러남
- 또한, 전 세계적인 의료인 부족 현상으로 국제보건인력 채용이 필요한 상황임

❍ 하지만, 지역 및 국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글로벌 표준 측면에서 의료데이터 용어에 대한 합의와 데이터 교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미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정보교환, 임상시험 설계 등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국제협력이 이루어짐

❍ 백신 제조, 유통, 공급 할당 과정에서의 국제협력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음

❍ 다만, 지적재산권 보호, 노하우 및 기술이전 등의 문제들이 백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표 Ⅱ-1> 보건 국제협력에 대한 정책 권고

최근 정책 조치	정책 권고
- 백신 R&D 분야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26]는 정부, 의료기관, 과학자, 기업, 시민사회 및 자선가들을 모아 COVID-19 테스트, 치료, 개발, 생산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함 - 또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대해 1억 2천만 개의 저렴하지만 괜찮은 품질의 신속한 CIVID-19 테스트를 약속함	- 의료용품과 인프라 활용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제품(의약품과 의료기기 포함)의 공급망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함 - 공급의 안정적 확보(security of supply)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공급망 구조 및 수용력에 대한 정보의 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보고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정할 것 · 국가 간 제품 부족분에 대한 보고와 공급업체 다변화(supplier diversification)를 위한 정책을 모색할 것 · 공급망 리스크(supply chain risks) 완화를 위해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공식화할 것 · 기존의 공동 조달 메커니즘을 심화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
- 치료법 개발을 위해 1,700건 이상의 임상시험 결과가 분석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를 위해 최대 290만 명분의 덱사메타손(dexamethasone)[27]을 확보함	- 위험에 처한 인구를 식별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팬데믹 경고 시스템(pandemic alert system) 작동을 위해 국경을 넘어 세분화되고 시기적절한 데이터 사용이 요구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글로벌 표준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모니터링 및 데이터 보안도 함께 강화시켜야 함
- COVAX[28]는 백신개발 속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 및 조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18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R&D 자금을 지원하는 푸시메커니즘(push mechanisms)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제선구매공약(Advance Market Commitments, AMC)[29]과 같은 풀메커니즘(pull mechanisms)을 함께 사용해야 함
	-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백신 및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할당하는 제품수량의 기준을 정해야 함 - 백신개발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엄격한 방법론 기준을 준수하면서 견고하게 설계된 임상실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주: OECD(2021)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작성함.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 참조

26) 코로나19 진단,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생산을 가속화 하고 이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WHO, EU집행위원회, 프랑스 정부를 주축으로 출범.

2. 기후변화: 탄소중립(net-zero) 추진

❑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국가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임

❍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배출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거나, 전혀 책정하지 않고 있음 (OECD, 2021)

❍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는 탄소집약 산업의 생산 및 투자를 더욱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결국, 이는 좌초자산기업(stranding assets)[30]의 리스크를 증가시켜 향후 전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한 개별 국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전환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탄소가격 책정과 같은 기후정책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감축기술에 대한 접근 및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구축을 위한 정책들도 국제사회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함

27) 영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치료제 실험인 '리커버리' 프로그램은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치명률을 크게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덱사메타손은 일본에서 공식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된 바 있음.
28) ACT-A 이니셔티브에서 백신을 담당하는 파트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 대시혁신연합(CEPI)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백신 제조사 간의 파트너십으로 모든 국가에 공평한 백신 공급을 목표로 함.
29) 공여국들의 재정공약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성공 시 해당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방식.
30)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좌초자산 기업은 저탄소전환으로 인해 자산조기상각 또는 부채전환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을 의미.

<표 Ⅱ-2>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정책 권고

최근 정책 조치	정책 권고
-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중간목표, 세부수준 및 적용범위 등이 포함된 장기탄소중립목표를 채택하거나 발표함 - 공약의 세부사항은 국가별로 다르며, 목표 달성방법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음	- 2021년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는 2015년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발표된 목표에 맞춰 단기적인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31] 및 장기적인 국가 저탄소전략을 모두 채택하고 업데이트해야 함 - 저탄소전략의 경우 모든 탄소배출 섹터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탄소가격 책정 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해야 함
- 2018년과 2019년, UN 당사국총회(COP)는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에 동의함	- 탄소누출(carbon leakage)[32]과 같은 국제적 스필오버를 고려하고, 국가 간 협력영역을 식별하여 국가의 탈탄소전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함
- 더 많은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들이 탄소가격책정 메커니즘을 도입하거나 기존 메커니즘을 강화함	- 정책도구 선택 및 정책시행 시기 결정 시, 투명한 비용 및 편익분석(benefit evaluation)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기업성과와 가계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
- 2016년부터 G20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중국, 미국, 멕시코,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프랑스, 인도 등의 국가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동료 검토(peer reviewing)를 진행할 계획임	- 가능한 최소비용으로 글로벌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탄소누출 및 기업 경쟁력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탈탄소화전략 설정 및 실행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조정 과정이 필요함 - R&D를 포함한 저탄소 관련 투자 및 혁신에 자원을 재할당하기 위해 탄소집약 산업에 대한 화석연료 보조금 및 인센티브의 단계적 폐지를 우선해야 함

주: OECD(2021)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작성함.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 참조

31) 각국의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과 감축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배출량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계획.
32) 기업들이 탄소배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 느슨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으로, 한 국가에서 엄격한 배출규제를 시행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게 됨.

3. 무역: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기반의 무역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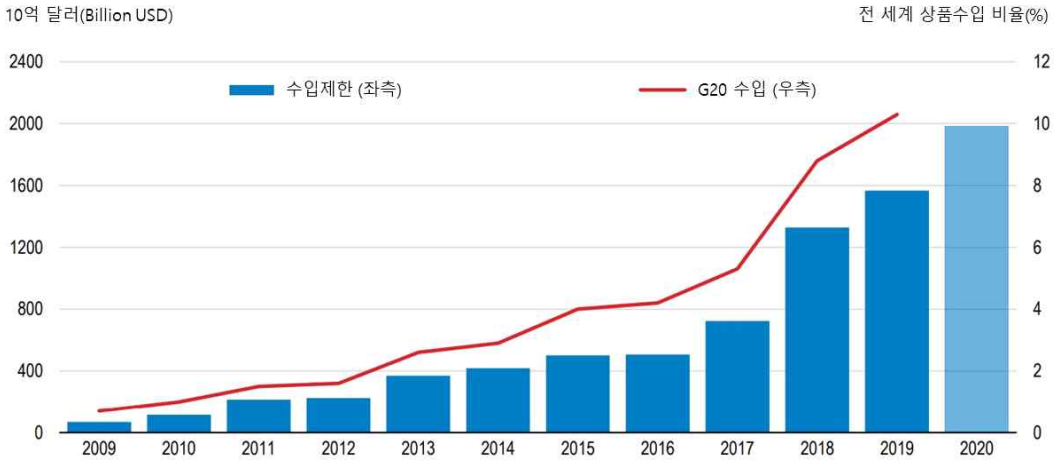
❑ COVID-19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특정상품의 일시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필수상품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정부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

❍ 일부 국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regionalization), 또는 특정 상품의 생산 리쇼어링을 요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은 단축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정책은 더욱 제한적인 추세를 보이게 됨 ([그림 Ⅱ-1] 참고)

[그림 Ⅱ-1] COVID-19 위기 이후 제한적 무역정책 추세

G20 국가의 누적 수입제한 조치[1]



1. 추정된 누적무역범위는 2009년 이후 기록된 수입조치 및 무역모니터링DB(Trade Monitoring Database, TMDB)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해당 추정치는 HS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수입조치가 포함됨. 해당 수치에는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 및 COVID-19 무역 관련 조치들은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값은 UNSD Comtrade DB에서 가져왔으며, 2020년 추정치는 6월까지의 제한사항만 포함.
자료: World Trade Organisation.

❑ 특히, COVID-19 위기 동안 의료제품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정부차원에서의 무역대응이 더욱 중요해짐

❍ 각국은 의료제품의 거래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을 촉진하고,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함

- 이에 2019-2021년, 이를 위한 대규모 무역협정들이 체결됨

❑ COVID-19 팬데믹으로 필수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규모의 경제 창출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짐

❍ 시장조건,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정보공유 등은 무역의 흐름을 유지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에서 가치사슬을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임

❍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서비스 거래도 동시에 촉진되어야 함

<표 Ⅱ-3> 국제무역에 대한 정책 권고

최근 정책 조치	정책 권고
-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들이 체결됨 · ASEAN 국가와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를 포함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SPTPP) ·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 일·EU 경제연대협정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 캐나다와 EU 간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 EU-일본 자유무역협정	- 기존의 무역규칙 시행을 보장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규칙기반무역(rules-based trade)을 강화해야 함 - 시장을 왜곡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기존 규칙들과의 차이(gap)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와 경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에 동의해야 함
- 2013년 발리에서 체결된 WTO 무역 원활화 협정(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은 상품 수출입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17년에 발효됨 - 이와 같은 무역 원활화 조치는 의료품목의 국경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WTO 무역 원활화 협정의 완전한 이행, 무역지원을 위한 국내 개혁(trade-conducive domestic reforms), 새로운 형태의 안전한 여행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촉진해야 함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자발적 지침 및 규범 등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경제협력 도구들을 활용하여 국제 경제협력을 진전시켜야 함

주: OECD(2021)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작성함.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 참조

4. 과세: 경제 디지털화에 대한 세금

□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국제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ation) 규정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합의된 국제표준에서 벗어난 관할구역(jurisdictions)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분쟁과 조세불확실성도 함께 증가함

○ COVID-19 위기 이전에도 BEPS(Base Erosion and Profit-Shifting)[33] 관행은 국가들에 연간 1,000-2,4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으며, 이는 글로벌 법인소득세 수입의 4-10%에 해당함

○ 이는 국제 조세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글로벌 투자 및 성장에 대한 위험을 경고함

□ 조세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예산수입을 확보하고 조세경쟁 및 조세회피 범위를 줄이는 것은 물론, COVID-19 위기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에 대해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34]는 BEPS의 지속적인 시행과 경제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5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통합함

33)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으로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34) BEPS, 즉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이자 디지털 과세를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

<표 Ⅱ-4> 디지털 과세에 대한 정책 권고

최근 정책 조치	정책 권고
- 2017년과 2018년에 시행된 금융정보자동교환제(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로 총 4조 9천억 유로에 달하는 4700만 개의 역외 은행계좌가 교환됨 - 뿐만 아니라, 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mes)을 통해 확인된 950억 유로 이상의 추가 수익과 국제금융센터의 은행예금의 대폭 감소를 초래함	
- 2020년 10월, Inclusive Framework(IF)가 경제 디지털화로 인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함 - 이에 G20은 IF에 2021년 중반까지 글로벌 합의기반 솔루션에 도달할 것을 촉구함	-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다자간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

주: OECD(2021)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작성함.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 참조

Ⅲ. 국가별 과제(Country note)

1. 호주

□ (개요) 팬데믹은 특히 젊은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기존의 교육 불평등을 부각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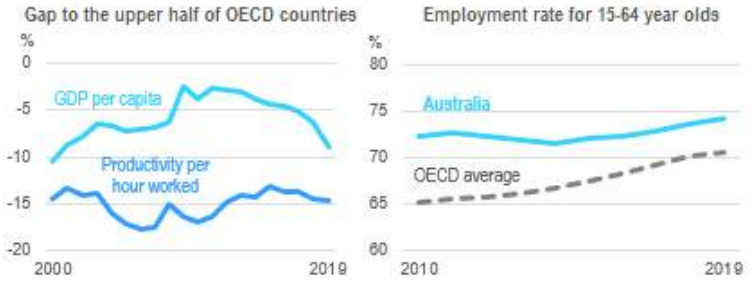
❍ 회복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혁신과 재분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을 증진시키고, 원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그림 Ⅲ-1] 코로나19 이전 성과 - 호주

[경제]

- 1인당 GDP는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9% 낮음
- 생산성은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5% 낮음
- 취업률은 높고, 2020년 위기 이전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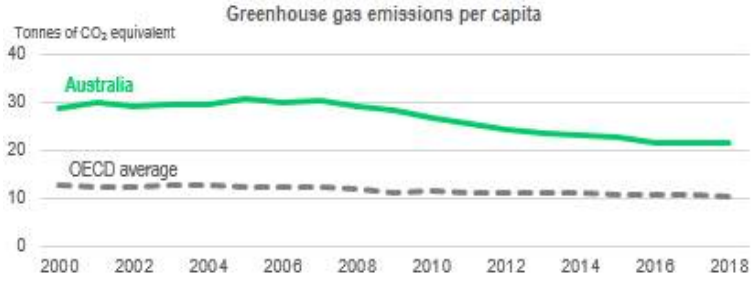


[불평등]

- 불평등 정도는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음
- 최빈 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7.2%를 벎

[환경]

- 유해 수준[1]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비율은 매우 낮음
-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주: 1) 지름 2.5μm이하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10μg/m3 이상을 의미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74, 재구성

<표 Ⅲ-1> 우선순위에 따른 2019-2020 개혁 및 권고사항 - 호주

2019-2020 개혁	권고사항
경쟁 및 규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운영되는 기본여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2020년, 정부는 지역 간 직업면허의 자동 인정을 제안 ☑ 2020년, 정부는 여러 규제 절차를 간소화·디지털화 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청산 비용을 낮추고 절차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만듦 ☑ 2020년, 정부는 환급 가능한 연구개발세상계금(R&D tax offset)을 증액 ☑ 2020년, 정부는 전략적대학기금[35] 조성을 위해 중기 자금을 지원	☐ 관할지역 간 직업면허 자동상호인정법 제정 ☐ 불필요한 요식 행위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제품 표준을 더욱 광범위하게 채택 ☐ 추가적인 민간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R&D 직접지원 및 설계 조치를 강화 ☐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
교육 및 숙련: 교육 및 숙련에 대한 불평등은 경제의 성장 능력을 제한함을 고려해야 함	
☑ 2020년 소외계층 학생과 졸업생의 교육 성과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지출이 증가	☐ 학교·유아 교육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된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 시간 손실을 보상하는 선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포함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고품질 온라인 학습 및 개방형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 교육 선택을 위해 개선된 정보를 제공(직업정보, 교육경로 및 취업결과가 포함된 단일 플랫폼을 포함)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89

35) Strategic University Reform Fund: 대학이 혁신적인 개혁 프로젝트와 지역사회가 정한 우선분야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

2.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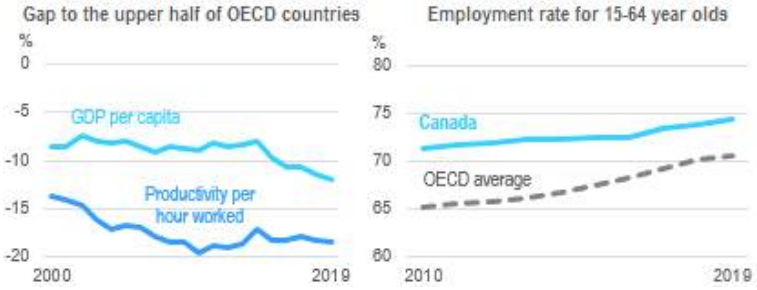
□ (개요) 현재보다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팬데믹은 실업자나 빈곤층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를 부각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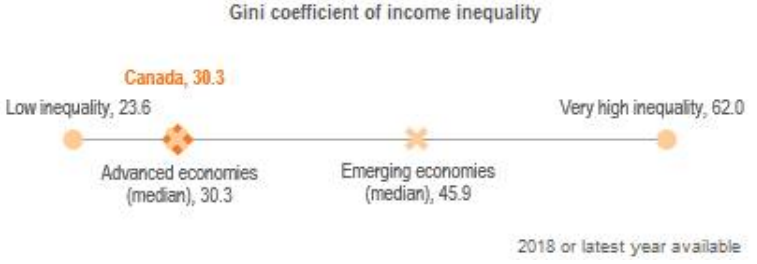
○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고, 원주민들은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림 Ⅲ-2] 코로나19 이전 성과 -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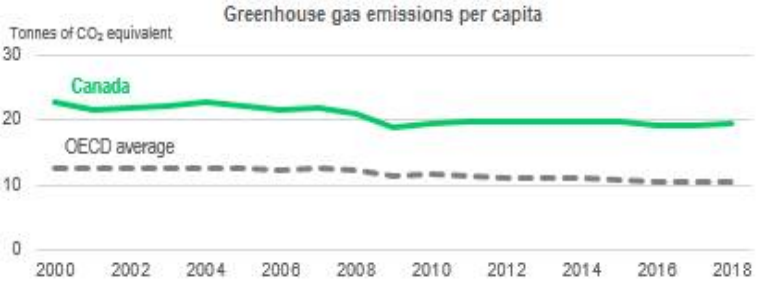
[경제]
- 1인당 GDP는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2% 낮음
- 생산성은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8% 낮음
- 취업률은 높고, 2020년 위기 이전 지속적으로 증가



[불평등]
- 불평등 정도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동일 수준
- 최빈 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7.7%를 벎



[환경]
- 유해 수준[1]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비율은 매우 낮음
-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주: 1) 지름 2.5μm이하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10μg/m3 이상을 의미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90, 재구성

<표 Ⅲ-2> 우선순위에 따른 2019-2020 개혁 및 권고사항 - 캐나다

2019-2020 개혁	권고사항
사회보장: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새로운 우선순위	☐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조치를 포함해 취약 가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화
노동시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함	
취한 조치 없음	☐ 보조금 인상 및 엄격한 질 관리 ☐ 2018년 도입된 아버지의 유급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요율을 인상 ☐ 여성기업을 위한 국가 전략 등을 통해 여성 기업가 정신을 장려
경쟁 및 규제: 대내무역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함	
☑ 2017년 캐나다 자유무역협정(CFTA)으로 대내무역협정을 대체한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음	☐ CFTA와 관련해 농업 공급관리제도[36]를 금지하고, 규제격차를 조정하며, 규제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분쟁은 신속히 해결
경쟁 및 규제: 국내외 공급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을 강화해야 함	
취한 조치 없음	☐ 방송·통신, 항공운송에서 외국인 소유 제한을 축소 ☐ 전문 서비스업, 항공·도로 운송에서 외국 공급 업체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진입 규제를 완화 ☐ 전력시장을 통합하고 경쟁력을 제고, 캐나다 우체국 민영화를 통해 법적 독점성을 제거 ☐ 소매 무역 허가를 위한 요건을 축소
조세제도: 비효율적인 조세지출을 폐지하고 탄소가격 상승을 억제시켜야 함	
☑ 2019년, 범 캐나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체계(PCF)[37]에 따른 탄소가격 책정이 시행되었고, 연간 가격 인상이 진행 중(2022년 종료 예정)	☐ PCF에 따른 탄소가격 추가 인상 일정을 수립 ☐ 명확한 시장 실패 때문이거나 공정성을 목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 조세지출은 폐지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96

36) supply management regime: 생산량을 할당해 출하·판매를 규제하는 제도
37) PCF(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

❑ (최근 구조개혁 진행사항) 연방·지방정부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은 일반적으로 “Going for Growth”에서 권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처로 바빴기 때문에 2020년 개혁은 진전이 더딘 편

❍ 캐나다 정부 시스템은 매우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 진행 시 종종 정부 간 조정이 요구되며, 합의 도출이 더딜 수 있음

3. 중국

□ (개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 및 사회보장 시스템에서의 취약점을 부각시켰고, 여러 가구 및 기업들을 파산 직전에 이르게 하였음

○ 또한, 다음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킴

i) 피해규모가 큰 지역과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지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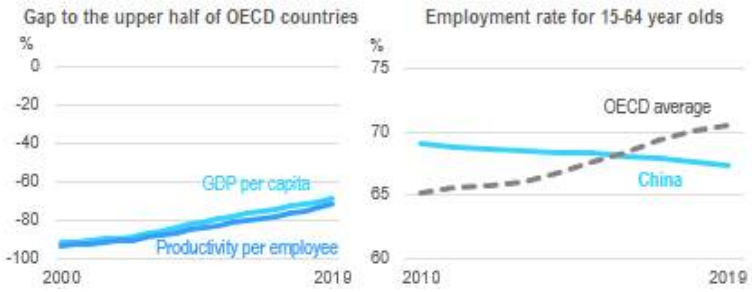
ii) 이미 빚을 지고 있던 빈곤층 가구와 부유층 가구 간

iii) 인프라 접근이 제한되고 수요 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민간 부문과 국유(state-owned) 부문 간

[그림 Ⅲ-3] 코로나19 이전 성과 - 중국

[경제]

- 1인당 GDP는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69% 낮음
- 생산성은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72% 낮음
- 취업률은 2020년 위기 이전에 하락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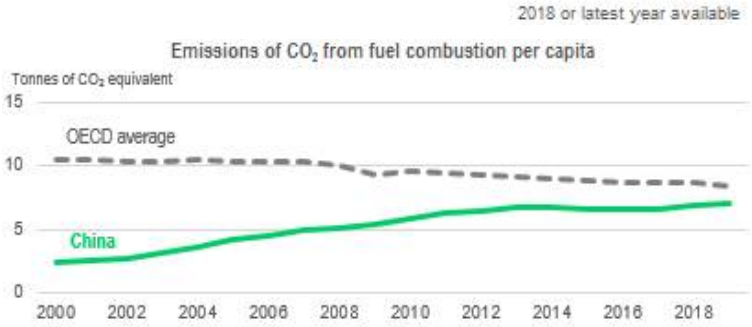


[불평등]

- 불평등 정도는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높음
- 최빈 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6.5%를 벎

[환경]

- 인구의 3/4 이상이 유해 수준[1]의 대기오염에 노출
-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주: 1) 지름 2.5μm이하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10μg/m3 이상을 의미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97, 재구성

<표 Ⅲ-3> 우선순위에 따른 2019-2020 개혁 및 권고사항 - 중국

2019-2020 개혁	권고사항
보건: 빈곤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줄여야 함	
새로운 우선순위	□ 의료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 축소 □ 치료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배상율 적용 □ 고품질 공중보건 자원을 보다 고르게 분배
노동시장: 재배치 촉진을 위해 노동력 이동을 활성화하고 기술 공급을 개선해야 함	
☑ 코로나19 발발의 결과로 2020년 이후 외래진료 비용의 온라인 정산 가능 ☑ 2020년, 사회보장 일시적으로 확대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학부 전공으로 도입하는 대학 증가	□ 연금급여의 지역 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수준에서 연금 기금을 통합 □ 중기적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 직원의 연금제도를 통합 □ 인기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의 전공을 신설하여 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과 역량이 잘 조화되도록 보장
경쟁 및 규제: 금융시장 자유화와 규제 간 균형을 잘 유지하여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함	
☑ 2020년 8월, 민간대출 금리 상한선이 낮아져 위험가격 책정이 어려지고 고위험 대출자들이 법적인 자금조달원에서 자격을 박탈	□ 지역 수준에서 특권 기업의 행정독점을 없애고 중국 단일 제품 시장을 조성 □ 외국 기업의 진입·활동에 대한 제한, 특히 합작투자 또는 기술이전 시 요건을 해체 □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의 암묵적 보장을 제거 □ 조기 금융 교육을 통해 금융 이해력을 향상 □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의 공개 및 투명성 향상
거버넌스 및 법률: 법률 및 규정 미준수를 방지해야 함	
☑ 2012년에 시작된 반부패 캠페인을 진행 ☑ 2020년 10월, 14개 정부기관에서 온라인 판매 감독 강화를 위한 고시를 발표 ☑ 2020년 5월, 4개 정부기관의 고시에 공정경쟁검토회[38]에서 조사해야하는 주요 분야를 명시	□ 공무원들의 부패 방지를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
환경정책: 환경정책 수립 및 시행을 강화해야 함	

38) Fair Competition Review Mechanism

☑ 2020년 9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고 선언 ☑ 2019년 5월, 제 3자의 석유, 가스 등의 수송 관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 ☑ 가스 부문이 자유화 되었고, 2020년 3월 공지를 통해 민간기업의 동 부문 진출을 권장	□ 환경 목표를 높이고, 집행을 강화하며,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 □ 석탄 연소에서 가스 연소 발전으로의 전환을 계속하고, 농업에서 비료 사용을 억제하며, 폐수 방출 전 처리 과정을 확대 □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관련 세금을 인상하고, 기화변화 경감 조치를 강화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p.99-100

❑ (최근 구조개혁 진행사항) 모든 분야의 개혁 강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

❍ 2060년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판단됨

❍ 외국인 진입을 위해 은행 부문을 개방하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임

❍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강화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4.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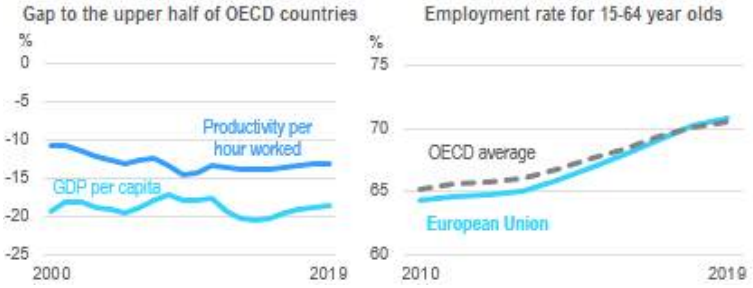
❑ (개요)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인 “차세대 EU[39)]”의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는 것임

❍ “차세대 EU”의 성공적인 시행은 EU 전체의 경기 활성화,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촉진, 미래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기후 및 포용성 목표 달성에 중요

[그림 Ⅲ-4] 코로나19 이전 성과 - EU

[경제]

- 1인당 GDP는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9% 낮음
- 생산성은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3% 낮음
- 평균적으로 취업률은 2020년 위기 이전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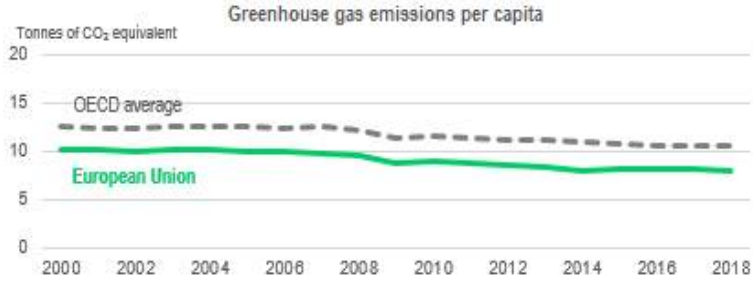


[불평등]

- 평균적으로 불평등 정도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동일. 단, 국가별 편차는 심한 편

[환경]

- 유해 수준[1)]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비율은 매우 낮음
-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주: 1) 지름 2.5μm이하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10μg/m3 이상을 의미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120, 재구성

39) Next Generation EU: 회원국들의 회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EU 27개 회원국 2019년 GDP의 약 5.5.%의 대출과 보조금을 결합한 경기부양 계획

<표 Ⅲ-4> 우선순위에 따른 2019-2020 개혁 및 권고사항 - EU

2019-2020 개혁	권고사항
R&D 및 디지털화: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 확산을 촉진해야 함	
☑ 2021~2027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예방적 구조 조정, 파산 및 부채 면제에 관한 EU 회원국의 법률과 절차를 조율하기 기 위해 새로운 지침 "EU No. 2019/1023"을 2019년 7월 발효	☐ R&D의 국가 간 협력을 장려 ☐ EU 예산에서 R&D 지출을 추가로 확대 ☐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 ☐ 최소의 유럽 기준을 통해 파산절차를 조율하여 보다 간단한 조기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청산 및 퇴출 절차 시간을 단축
경쟁 및 규제: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부문에서의 단편화를 줄여야 함	
☑ 2019~2020년 동안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전문직 자격 지침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 노력을 강화 ☑ 전력시장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경 간 상호접속 용량의 70% 이상이 거래 시장에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	☐ 국경 간 서비스 수립·제공과 EU 법률 시행 지침에 대한 단순화된 행정 절차를 통해 비즈니스 서비스의 장벽을 해결 ☐ 전력 시스템 운영 및 전력 거래에 국경 간 협력을 추구
환경정책: 탈탄소화 및 녹색 혁신을 가속해야 함	
☑ 2019년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European Green Deal을 시작	☐ 에너지 효율을 위한 규제 표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EU 배출권 거래제(ETS)[40]에 운송 및 건물을 포함 ☐ 특히 세율이 낮거나 0인 경우, ETS에서 제외되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최소 세율을 인상 ☐ ETS 배출 허용량과 배출 감소 목표가 일치하도록 그 격차를 점차 좁혀야 함 ☐ EU,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목표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노동정책: 자격증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 저숙련 성인 등에 대한 학습·훈련 이동성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Erasmus+ 프로그램[41] 자금 조달이 2021년~2017년에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유럽노동국이 설립되었고, 2024년 완전한 운영 능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규제 대상 직업에 대한 자격이나 훈련 요건을 EU 차원에서 조율 ☐ 전자식 유럽 직업 카드를 모든 부문에서 사용 ☐ 국경 간 공동 노동, 사회보장 및 세금 통제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함에 있어 EU 차원에서 노력을 강화
농업: 교육 및 숙련에 대한 불평등은 경제의 성장 능력을 제한함을 고려해야 함	
☑ 2020년, European Green Deal의 일부인 Farm to Fork Strategy는 식품 시스템의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설정	☐ 공동 농업정책에서 생산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금의 단계적 폐지 ☐ 직접지원을 재평가하고 이를 환경·기후변화 완화와 탄력적인 농업 지원에 활용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p.122-123

❑ (최근 구조개혁 진행사항) 2019년에는 탈탄소화, 환경 지속가능성 및 경제 성장을 위한 "European Green Deal"이 시작되는 등 EU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리더십에 변화가 있었음

❍ "European Green Deal" 관련 법제화 및 시행은 주로 2021년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구조개혁 속도가 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팬데믹 위기에 대한 EU의 대응은 일회적이기는 하지만 공통의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강력한 진전을 보여주었음

40) EU Emissions Trading System(ETS)
41) 교육·연수·스포츠·청소년 분야 지원 프로그램

5.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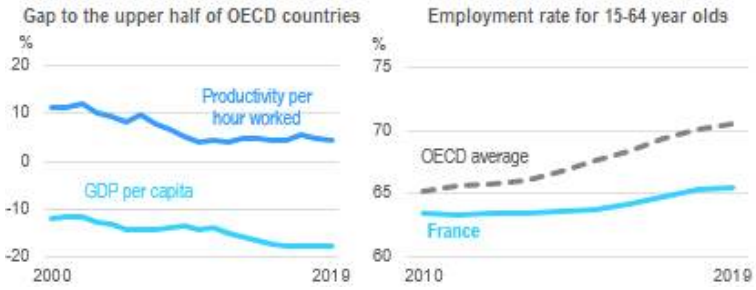
❑ (개요) 더디고 고르지 않은 회복은 코로나19 위기 초 부정적으로 나타난 발생분포를 고착화시키고 기회의 불평등을 확대시킬 위험이 있음

❍ 숙련 및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점으로 하는 1000억유로 규모의 회복 계획은 국가의 오랜 도전과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임

[그림 Ⅲ-5] 코로나19 이전 성과 -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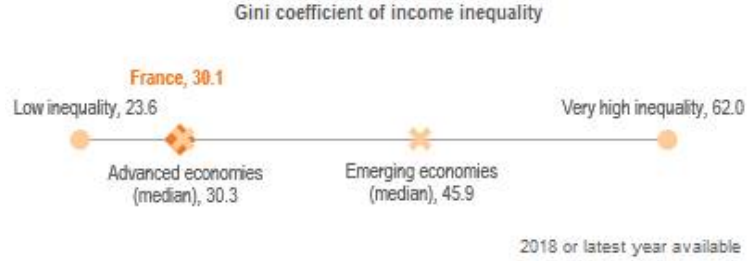
[경제]

- 1인당 GDP는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8% 낮음
- 생산성은 OECD 상위 18개국과 동일 수준
- 취업률은 낮으나, 2020년 위기 이전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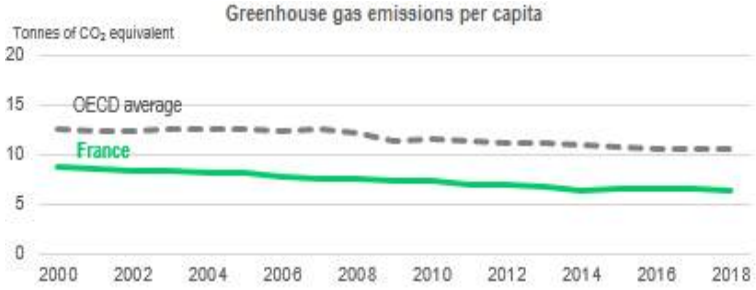
[불평등]

- 불평등 정도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동일
- 최빈 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8.6%를 벎



[환경]

- 인구의 2/3가 유해 수준[1]의 대기오염에 노출
-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주: 1) 지름 2.5μm이하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10μg/m3 이상을 의미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128, 재구성

<표 Ⅲ-5> 우선순위에 따른 2019-2020 개혁 및 권고사항 - 프랑스

2019-2020 개혁	권고사항
교육 및 숙련: 교육 및 훈련에서 공평성과 질을 높여야 함	
☑ 2019~2020년, 소외 지역에서 추가 학년을 위한 학급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 ☑ 2019~2020년, 소외지역 유치원에 추가 보너스 및 보조금을 지급 ☑ 2019년 9월, 소외지역 학교 교사의 보너스를 인상 ☑ 2019년, 견습생을 위한 단순화 조치 시행 ☑ 2020년, 회복계획을 통해 저숙련 근로자 및 실업자에게 훈련명목의 추가 자금을 제공	☐ 저소득 가구 및 빈곤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보육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 ☐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실시(추가적인 평가 및 상담 강화 필요) ☐ 청년 취업지원 체계의 간소화 추진 ☐ 조기 진로지도 실시 및 사회적 파트너 참여
노동시장: 노동시장 분절화를 줄여야 함	
☑ 2019년 경제활동 추가수당[42]을 인상하였고, 사회급여를 개혁하고 단순화하는 프로젝트도 시작 ☑ 2019년 대기업 법인세 공제 개혁은 저임금에 대한 사회보장 축소 대상을 확대시킴 ☑ 2019년 실업개혁은 12개월 동안의 월 임금을 활용해 실업급여를 산출할 계획 ☑ 2020년 회복 계획에서 청년층 임시 고용보조금을 도입	☐ 인건비 구조화를 통해 단기 계약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 ☐ 회복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면, 임시 고용기간이 반복되면서 지급되는 실업수당을 제한
경쟁 및 규제: 경쟁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춰야 함	
취한 조치 없음	☐ 집단구조조정 절차를 검토하고 법원 절차에서 속도를 향상 ☐ 확장된 채용 지원 프로그램, 특히 관리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기업에게 제공 ☐ 경쟁에 관한 법률 초안이나 규정에 대해 독립적인 영향 평가를 실시 ☐ 규제 대상 직업군[43]에 대한 진입 장벽, 쿼터, 독점권을 축소
환경정책: 더욱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함	
새로운 우선순위	☐ 운송세제에서 환경적인 외부효과를 잘 고려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에 대해 선별적 조치를 마련 ☐ 식물 보호 제품의 위험 평가, 특히 상호작용의 영향에 대한 위험 평가를 강화
공공 거버넌스: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함	

42) Prime d'activité: 근로(사회보장 기여)를 하고 있으나 저소득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러나 소득 기준이 세금을 면제받을 자격에는 속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충적 성격의 사회수당

43) 특정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직업으로, 법 관련 직업(법정변호사, 권리원, 공증인 등), 준-의료 활동분야(언어치료사, 발병전문의, 안경사 등), 특정 기술 직업(감독관, 구급차기사, 배의 선장 등), 사회·문화적 직

☑ 2021년, 일부 왜곡된 법인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될 예정	☐ 회복이 견고히 진행되면 지출검토를 기반으로 공공지출을 축소 ☐ 보건부문의 투자 선정 프레임워크를 다른 분야로 확대 ☐ 최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면세 및 세율인하의 활용을 억제 ☐ 효과적인 퇴직연령 연장 및 점진적 퇴직[44]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 패널티·보너스를 검토 ☐ 노동 이동성 개선 및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단일 연금 시스템으로 전환 ☐ 환경문제 등의 처리를 위해 지역 인프라 및 도시 계획의 책임을 지자체에 할당 ☐ 소규모 지자체를 병합하여 지방정부 조직을 간소화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pp.130-131

☐ (최근 구조개혁 진행사항) 정부는 노동시장, 교육제도, 법인세제, 연금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광범위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7월에 제정된 실업보험의 지속적인 개혁은 몇몇 부문에서 사회보장 기여금과 단기계약 등에서의 노동비용을 증가시켰음

- 2021년 개혁은 반복적인 단기계약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해짐

❍ 2021년 회복 계획에서는 일부 왜곡된 법인세제를 합리화할 예정

❍ 2019년 정부는 단일연금체제로 전환하고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개혁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개혁안이 입법화되지 않음

업(초등·중등 과정 학교 교사와 여행사 직원 등) 등이 이에 해당

44) gradual retirement: 정년을 전후로 하여 일정 연령 시점 이후 에는 근로시간을 부분적으로 줄이는 대신,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나 공적연금에서 부분연금의 형태로 줄어든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의 점진적 은퇴

6.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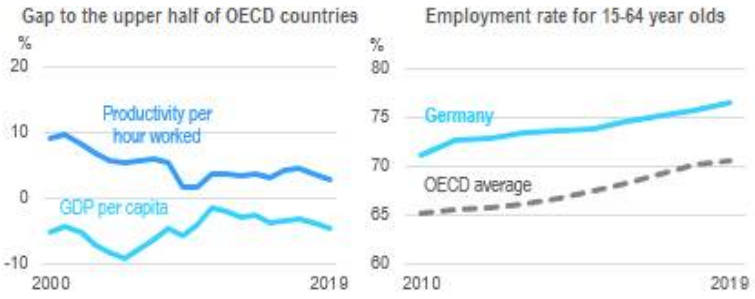
□ (개요) 독일은 중기적으로 다음 두 가지 중대한 과도기에 직면, 이에 인프라 및 지식기반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업 역동성을 되살리며, 숙련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함

○ 코로나19 위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원격 근무·의료서비스·학습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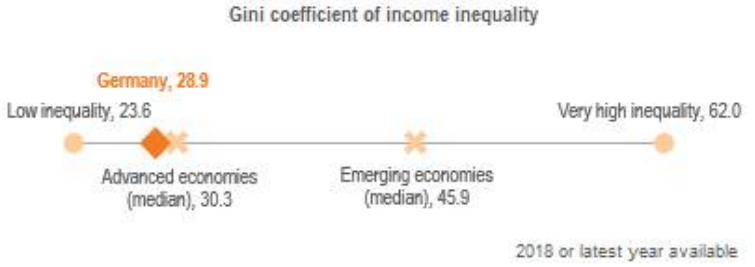
○ 에너지 전환은 행동, 소비 및 생산에서의 변화를 요구함

[그림 Ⅲ-6] 코로나19 이전 성과 -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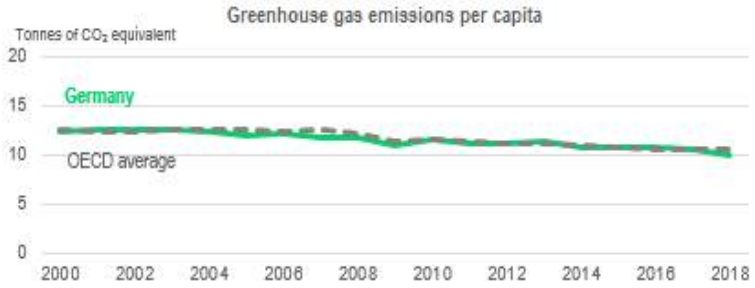
[경제]
- 1인당 GDP 및 생산성 모두 OECD 상위 18개국과 동일 수준
- 취업률은 높고, 2020년 위기 이전 지속적으로 증가



[불평등]
- 불평등 정도는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낮음
- 최빈 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8.4%를 벎



[환경]
- 인구의 3/4이상이 유해 수준[1]의 대기오염에 노출
-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주: 1) 지름 2.5μm이하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10μg/m3 이상을 의미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132, 재구성

<표 Ⅲ-6> 우선순위에 따른 2019-2020 개혁 및 권고사항 - 독일

2019-2020 개혁	권고사항
인프라: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야 함	
☑ 2020년 6월, 회복 패키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와 저배출 교통 인프라에 대해 추가적으로 투자	☐ 인프라 계획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수집·컴파일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을 개선 ☐ 우수한 도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 핵심기술 역할에서 지역 간 협력, 훈련, 인력확충을 통해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 ☐ 도시밀집화 촉진, 엄격한 임대차 규제 완화, 사회주택 투자 확대를 통해 역동적인 도시에서의 주택 공급을 개선
경쟁 및 규제: 기업 성장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산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여 재분배를 촉진해야 함	
☑ 개인 파산에 대한 채무 탕감 절차가 2020년부터 3년으로 단축될 예정 ☑ 2020년에 도입된 R&D 세제혜택의 연간 200만유로 상한을 2025년까지 400만유로로 확대	☐ 직업 교육·훈련 시스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직업 진입 조건을 자유화 ☐ 후기 단계 벤처 케피탈[45]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 ☐ R&D 세제혜택 상한 검토를 포함하여 지식기반 자본에 대한 투자 조건을 개선
교육 및 숙련: 기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함	
☑ 2019년 도입된 국가숙련전략은 프로그램을 시장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훈련통계 등을 개선하며,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업을 가진 개인에게 훈련 기회를 확대 ☑ 2020년부터 초등교육 종일제 확대를 위해 투자 프로그램을 가속화	☐ 직업 교육·훈련이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예비 교육이라는 강점을 유지하면서 직업전문학교 내 일반교육을 강화 ☐ 모듈식 자격 취득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고, 실무에서 습득한 기술의 인정을 촉진 ☐ ICT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ICT 교육을 확대 ☐ 전산적 사고[46]를 조기에 도입하고, 교육 및 진로지도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 ☐ 보육 가용성 및 유연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
노동시장: 부모가 유연근무 시간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치원, 어린이집, 탁아소 등의 수용력 확대뿐 아니라 보육의 질 향상, 비용 절감, 지역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2020~2022년 동안 50억유로 이상의 추가 자금을 지원	☐ 부소득자(second earner)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축소 ☐ 부부가 최대 육아휴직 자격을 얻기 위해 두 번째 부모가 가져야하는 최소 휴직기간(현재 2개월)을 연장 ☐ 가능하면 모든 근로자의 유연근무(재택근무 포함)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강화
조세제도: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격차를 줄이고, 덜 왜곡된 세금으로 전환해야 함	

☑ 2021년부터 운송 및 난방에 탄소가격 책정을 도입 ☑ 2025년까지 부동산세 평가를 업데이트할 예정 ☑ 2020, 2021년 사회보장기여금 상한(임금의 40%) 도입	☐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축소 ☐ 상속세 및 자본소득세 면제 폐지 ☐ 가계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다른 소득원에 적용되는 한계소득세율로 인상 ☐ 질소산화물 NOx 배출에 대한 과세를 도입 ☐ 배출가격 인상과 함께 부문 및 연료 전반에 걸쳐 배출가격의 일관성을 확보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p.134-135

□ (최근 구조개혁 진행사항)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은 보건, 일자리 및 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짐

○ 소비를 지원하고 디지털화, 교육, 의료, 대중교통 및 녹색 에너지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 또한 시행함

- 파산 후 부채 탕감 절차를 개선하고 R&D 지원 확대를 위한 주요 개혁을 포함

○ 근로소득세 감소와 환경세 증가에 대한 진전은 이루어졌으나, 근로소득세 격차[47]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

45) venture capital: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에 자금을 대고 경영과 기술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
46)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 일체
47)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부담하는 노동비용(세전 임금)과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세금 등을 공제 후 실제로 받는 임금(세후 임금)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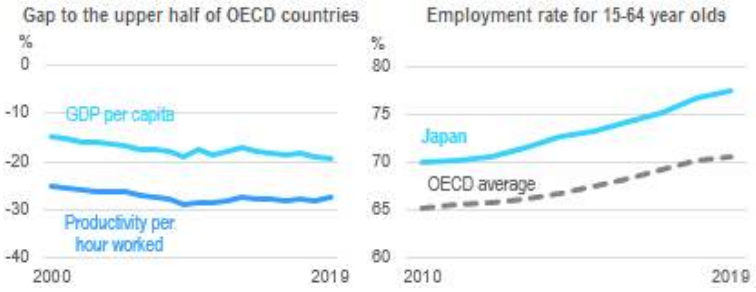
7. 일본

□ (개요) 심각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일본의 코로나19 회복 전략은 노동력 참여 강화 및 기업 역동성 촉진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또한 교육 및 디지털 기술 활용에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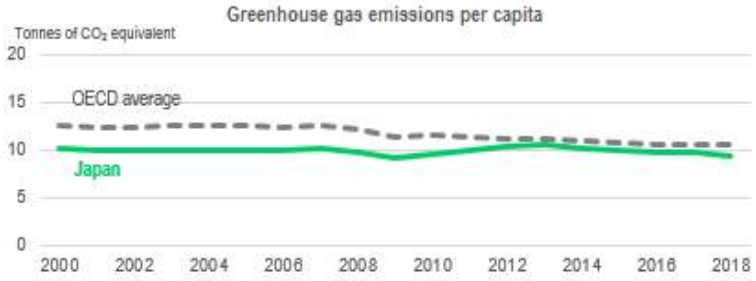
[그림 Ⅲ-7] 코로나19 이전 성과 - 일본

[경제]
- 1인당 GDP는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9% 낮음
- 생산성은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28% 낮음
- 취업률은 높고, 2020년 위기 이전 지속적으로 증가



[불평등]
- 불평등 정도는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높음
- 최빈 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6.5%를 벎

[환경]
- 인구의 3/4 이상이 유해 수준[1]의 대기오염에 노출
-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지 않고 있음



주: 1) 지름 2.5μm이하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10μg/m3 이상을 의미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168, 재구성

<표 Ⅲ-7> 우선순위에 따른 2019-2020 개혁 및 권고사항 - 일본

2019-2020 개혁	권고사항
노동시장: 다양한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업무 스타일을 허용해야 함	
☑ 2020년,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피고용인 보험 자격을 확대하는 법률을 개정(2022년 발효) ☑ 2020년, 기업의 의무 은퇴 연령을 연장 또는 폐지하고, 퇴직연령 선택권 확대를 위한 법률을 개정	☐ 사회보장제도, 규정, 보육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진 근로자를 지원 ☐ 이동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을 강화 ☐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지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
경쟁 및 규제: 특히 서비스업, 농업, 중소기업 부문에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함	
☑ 2020년, "외환 및 대외 무역법"[48]이 개정되어 일부 거래의 사전 신청이 용이해짐 ☑ 2020년, 농업생산기반과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식품,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개정[49]	☐ 파산제도 개혁, 기업가 교육 및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기업 역동성을 제고 ☐ 서비스 수입(import)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 효과적인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물 특정품목 보조금 지원을 재조정(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
교육 및 숙련: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개선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새로운 우선순위	☐ STEM[50] 분야와 능동적인 학습을 위한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대학에서 STEM 분야에 있는 학생 수를 증가 ☐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
조세제도: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공공재정을 위해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 인상	☐ 소비세율 소폭 인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 ☐ 법인세율은 더 낮추고, 양도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인상 ☐ 조세절차에 대한 인터넷·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시스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기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
환경정책: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 R&D 및 자금조달을 강화해야 함	

48)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49) Basic Plan for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50) STEM: 과학(S), 기술(T), 공학(E), 수학(M)의 줄임말
51)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
52)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procurement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by electricity utilities

☑ 파리협정[51]에 따라 녹색 혁신·금융 촉진을 위해 2019년에는 장기 전략이, 2020년에는 환경 혁신 전략이 구체화됨 ☑ 2020년,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52]"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치 도입 ☑ 2020년 10월에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목표가 발표되었고, 2020년 12월에 새로운 녹색 성장 전략이 발표됨	□ 파리협정 및 환경 혁신 전략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행(재생 가능 에너지 R&D, 보조금 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 등을 포함) □ 공시 지침 또는 규칙을 통해 녹색 금융·투자를 장려 □ 환경 관련 조세, 배출권 거래제 또는 기타 시장 기반 메커니즘 등을 통해 가격 신호를 설정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p.170-171

□ (최근 구조개혁 진행사항) 일본은 오랫동안 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시행 일정이 더디고 성과지표도 낮게 나타남

❍ 팬데믹은 또 다른 취약성을 드러냈고 새로운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

❍ 정부는 디지털 전환 및 녹색사회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로드맵을 구상 중

8. 한국

□ (개요) 팬데믹은 이중구조의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부각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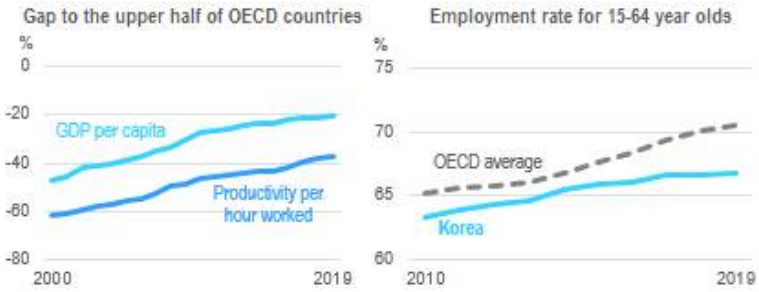
○ 복지개혁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여성과 고령 근로자들을 위해 취업률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근로자들이 위기 업종에서 성장산업으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임

[그림 Ⅲ-8] 코로나19 이전 성과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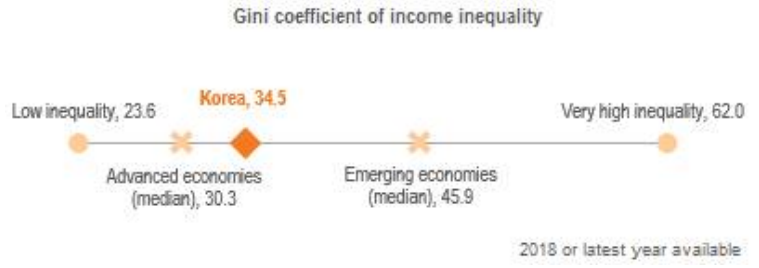
[경제]

- 1인당 GDP는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20% 낮음
- 생산성은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37% 낮음
- 취업률은 낮으나, 2020년 위기 이전 완만하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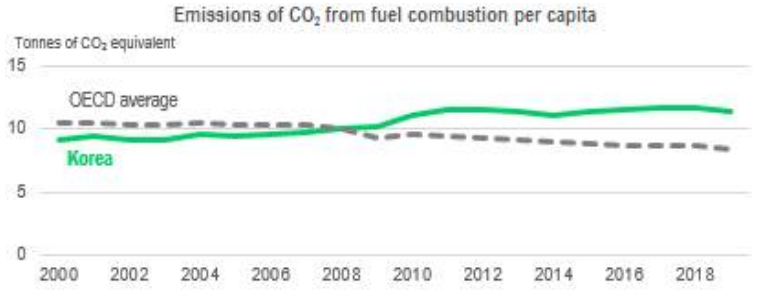
[불평등]

- 불평등 정도는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높음
- 최빈 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6.2%를 벎



[환경]

- 인구의 3/4 이상이 유해 수준[1]의 대기오염에 노출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높고,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지 않음



주: 1) 지름 2.5μm이하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10μg/m3 이상을 의미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172, 재구성

<표 Ⅲ-8> 우선순위에 따른 2019-2020 개혁 및 권고사항 - 한국

2019-2020 개혁	권고사항
사회보장: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2019년,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 적용 ☑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 ☑ 2020년, 고용유지보조금 인상 및 자격조건 완화 ☑ 2019년, 고령자 하위 20%의 월 기초연금 수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및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사회보험 준수를 강화 □ 증가하는 사회지출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세금(부가가치세나 환경 관련 세금 등)에 초점을 두면서 정부 세입을 점진적으로 증가 □ 최저 소득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집중하고, 국민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
노동시장: 고용보호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취한 조치 없음	□ 부당해고 시정 절차를 간소화·가속화 하고 투명하게 하여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
노동시장: 여성 및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함	
☑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평가제를 확대 시행 ☑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개선을 위해 2020년 가족돌봄휴가 도입 ☑ 2020년, 회사 규모, 성별, 업종 등을 기준으로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급여 등급을 보여주는 급여비교 홈페이지 개설	□ 구직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 고용 서비스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을 증가 □ 성별에 걸쳐 공정한 임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금 격차 결정요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석을 정기적으로 발표 □ 근로자가 경력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경쟁 및 규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해야 함	
☑ 정부는 신기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53]를 도입, 2020년 12월까지 404개 프로젝트를 승인 ☑ 2019년 규제자유특구 도입, 2020년 10월까지 21개 구역 지정 ☑ 2019년 규제 입증 부담을 규제 대상에서 규제 기관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도입, 2020년 범위 확대 ☑ 원격근무, 온라인수업, 원격의료 등 원격서비스에 대한 규제 일시 또는 영구적 완화	□ 과도한 규제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고려하면서 원격진료를 촉진 □ 행정지도[54]의 역할 축소 □ 중소기업 전용 사업분야에서 대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폐지
환경정책: 환경규제 및 가격 신호(price signal)를 강화해야 함	

53)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54) administrative guidance: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새로운 우선순위	□ 대기 오염물질 배출 상한 및 차량 배출 기준을 강화 □ 부문별, 연료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가격을 고르게 책정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가격을 인상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p.174-175

□ (최근 구조개혁 진행사항)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모멘텀을 높임

❍ 상병수당[55] 도입과 같은 일부 임시조치를 영구조치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되어 2025년까지 진행되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디지털·녹색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포함

55) sickness benefits: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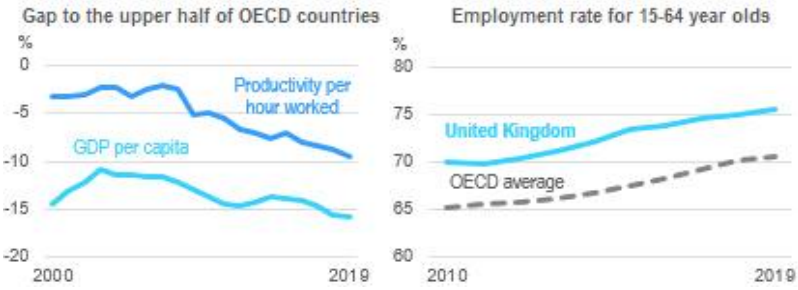
9. 영국

❑ (개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민 재교육 및 숙련 향상, 저렴주택[56]에 대한 접근성 확보, 투자 회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

❍ 취약한 사회집단은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어들면서 빈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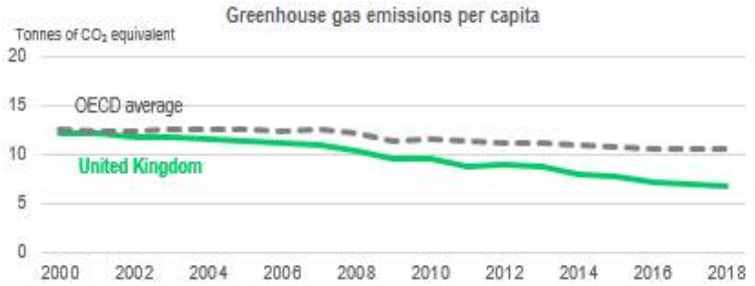
[그림 Ⅲ-9] 코로나19 이전 성과 - 영국

[경제]
- 1인당 GDP는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6% 낮음
- 생산성은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0% 낮음
- 취업률은 높고, 2020년 위기 이전 지속적으로 증가



[불평등]
- 불평등 정도는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높음
- 최빈 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6.7%를 벎

[환경]
- 인구의 절반이 유해 수준[1]의 대기오염에 노출
-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주: 1) 지름 2.5μm이하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10μg/m3 이상을 의미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238, 재구성

56) affordable housing: 주거환경이 최저 수준 이상을 만족시키면서 가격 또한 저렴해 저소득층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

<표 Ⅲ-9> 우선순위에 따른 2019-2020 개혁 및 권고사항 - 영국

2019-2020 개혁	권고사항
교육 및 숙련: 평생교육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함	
☑ 2020년 8월부터 정부는 모든 성인이 기초 디지털 숙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전액 자금 지원을 위해 성인교육예산의 법정 자격을 확대 ☑ 청년 의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고용에 필요한 숙련과 경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2020년 일자리 계획에서 숙련 및 견습에 대한 자금 지원을 16억파운드 증액	☐ 저임금·저숙련 근로자의 접근성 개선을 우선시하면서 평생학습을 위한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증가 ☐ 공공 고용 서비스인 Jobcentre Plus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 품질 및 효과를 개선 ☐ 저숙련 근로자에게 양질의 ICT 교육을 제공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와 낙후지역을 우선시 하면서 공공투자를 늘려야 함	
☑ 정부는 2020년 예산에서 전국의 도로, 철도, 통신, 학교, 병원, 전력망에 880억파운드를 편성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일부 공공투자 계획을 가속화	☐ 디지털 인프라 및 빈곤지역을 우선시하는 공공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 ☐ 공공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완전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건전한 거버넌스 필요 ☐ EU 및 기타 국가와의 무역·투자에서 낮은 장벽을 유지하여 시장 접근성을 보장(특히 서비스 부문)
주택: 주택 공급 및 건설에서의 경쟁을 개선해야 함	
취한 조치 없음	☐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 및 건설 경쟁을 개선하고, 자원 배분, 환경·사회 문제의 균형을 달성 ☐ 인지세[57]를 영구적으로 축소하고 고정세율로 전환
노동시장: 양질의 전일제 보육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함	
취한 조치 없음	☐ 풀타임 근로 및 부소득자(second earner)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처분소득에 비례하여 비용을 제한하면서 양질의 종일제 보육에 대한 지원을 증가
R&D 및 디지털화: R&D 직접지원과 세제혜택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 R&D 보조금 공공지출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	☐ "와해성 기술"[58] 및 신흥 부문에서의 민간 혁신을 활용하기 위해 R&D 직접지원과 세제 혜택 간 균형을 확보 ☐ 소기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240

57) stamp duty: 재산상의 권리를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58) disruptive technologies: 업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게 될 신제품이나 서비스

❑ (최근 구조개혁 진행사항)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정치·행정적 역할 및 개혁을 보류하였고, 2020년 1월 31일 EU를 탈퇴, 같은 해 12월 31일 단일 시장을 떠남

❍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이니셔티브와 남동부 이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됨

- 특히 공공투자 및 숙련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고 토지 이용 규제정비에 대한 개요를 보여줌으로써 일부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시작함

10. 미국

❑ (개요) 팬데믹 위기는 사회적, 민족적, 인종적 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음

❍ 특히 청소년, 교육수준이 낮은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및 라틴계 미국인, 아메리카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등 특정 집단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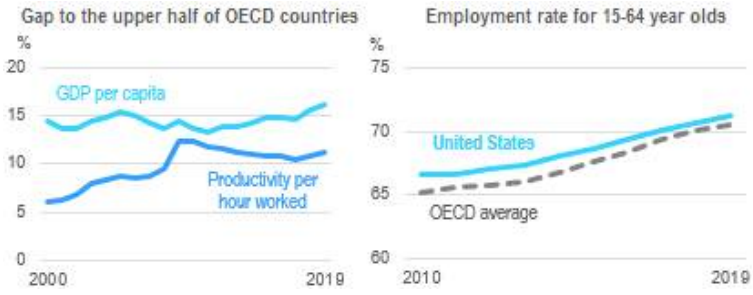
❍ 정부는 현금 이전을 제공하고 실업수당을 확대하여 취약 가구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였음

❍ 즉각적인 지원 외에 교육, 훈련 및 녹색 인프라 투자 강화는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공정한 성장에 기여할 것임

[그림 Ⅲ-10] 코로나19 이전 성과 - 미국

[경제]

- 1인당 GDP는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6% 높음
- 생산성은 OECD 상위 18개국 평균보다 11% 높음
- 취업률은 평균 수준이나, 2020년 위기 이전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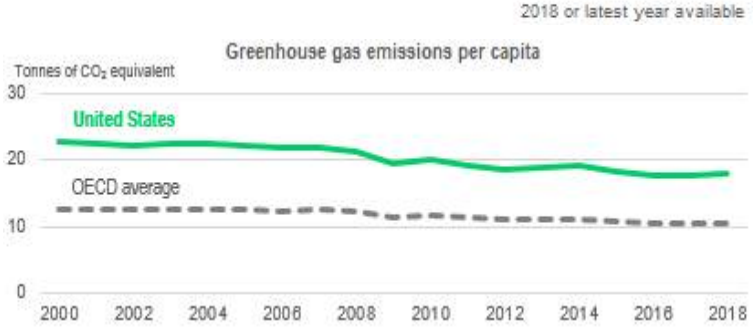


[불평등]

- 불평등 정도는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높음
- 최빈 가구의 20%는 전체 소득의 5.3%를 벎

[환경]

- 유해 수준[1]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비율은 매우 낮음
-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주: 1) 지름 2.5μm이하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에서 10μg/m3 이상을 의미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241, 재구성

<표 Ⅲ-10> 우선순위에 따른 2019-2020 개혁 및 권고사항 - 미국

2019-2020 개혁	권고사항
노동시장: 노동시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해야 함	
새로운 조치 없음	□ 취업 알선 서비스 및 지리적 이동 지원과 같은 비용 효율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을 증가 □ 실향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 □ 참여율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근로소득세 공제를 확대 □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 □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견습 및 현장 교육을 확대 □ 직업 면허를 취득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필요한 법적 제약을 축소
교육 및 숙련: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집단 전반에 걸쳐 기회의 평등을 향상시켜야 함	
새로운 조치 없음	□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주를 지원(선별적으로 연방 기금을 활용) □ 유급 가족휴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 □ 임금 격차를 줄이고 직업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보육 접근성을 개선
노동시장: 구역 제한, 직업 허가 및 경업금지계약[59]은 노동력 재분배를 제한시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노동력 이동 법안[60]이 2020년 1월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현재 논의 중	□ 공중보건과 안전에 매우 제한적인 우려가 있는 직업의 면허를 해제하도록 주에 권장 □ 다른 주의 직업 면허를 인정하기 위해 연방법을 활용(단, 대중 보호를 위해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함이 입증되는 경우, 주가 해당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인 경우, 경업금지규정 사용 금지
보건: 지출 효율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접근성 격차를 줄여야 함	
☑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나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은 없음	□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중심성과연구소[61]의 연구와 다른 처방약이나 처치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의 연구를 수행 □ 건강보험 보상에서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혀야 함
인프라: 인프라 투자로 인한 밀집 현상 및 환경의 질적 저하를 방지해야 함	

59) non-compete agreement: 고용인이 퇴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 취업 및 동종업 창업을 금지하는 것
60) Workforce Mobility Act: 동 법은 고용주가 직원과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거나 집행하겠다고 위협

☑ 2019년 이후 네바다, 몬태나, 미시간, 뉴욕, 메인, 루이지애나, 워싱턴 등 여러 주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제로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하여 민간부문의 재원을 확충하고 사용료 및 유연한 위험 분담 방식을 활용 ☐ 탄소나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 배출에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 ☐ 기상·기후 이변에 탄력적인 인프라에 투자 ☐ 도로망 유지보수를 개선하고 비용이 효율적인 대중교통에 더 많이 투자 ☐ 프로젝트의 비용편익분석을 바탕으로 광대역 네트워크 범위 확장에 지속적으로 투자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2021, pp.243-244

☐ (최근 구조개혁 진행사항) 팬데믹 이전에 다양한 인프라 지출 계획이 제안되었으나 초당적인 지원을 확보하지는 못했음

❍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중요한 개혁으로 불필요한 요식 행위가 감소됨

- 규제 기관이 경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 총 비용을 평가
-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최소 2개의 규제를 줄여야 함

❍ 연방 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디지털 기업에 대해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함

❍ 최근 이니셔티브는 기업·개인 소득세율 인하,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 부담 축소, 제약시장의 경쟁 강화 등으로 최근 몇 년 동안의 주요 개혁을 이어가고 있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61) Patient-Centered Outcome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Abate et al. (2020), "The COVID-19 crisis and state ownership in the economy: Issues and policy considerations, OECD COVID-HUB Policy Brief", OECD Publishing, Paris.

Adalet McGowan, M., D. Andrews and V. Millot (2017), "Insolvency regimes, zombie firms and capital reallocatio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Vol. 1399, https://doi.org/10.1787/5a16beda-en.

Abate et al. (2020), "The COVID-19 crisis and state ownership in the economy: Issues and policy considerations, OECD COVID-HUB Policy Brief", OECD Publishing, Paris.

Acemoglu, D. and P. Restrepo (2020), "Unpacking Skill Bias: Automation and New Tasks", NBER Working paper no. 2668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oston.

Acemoglu, D. et al. (2012), "The Environment and Directed Technical Change," American Economic Review 2012, 102(1), pp. 131-166.

Acemoglu D. (2002), "Directed Technical Chang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9, Issue 4.

Adalet McGowan, M. and D. Andrews (2018), "Design of insolvency regimes across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Vol. No. 1504, https://doi.org/10.1787/d44dc56f-en.

Adalet McGowan, M., D. Andrews and V. Millot (2017), "Insolvency regimes, zombie firms and capital reallocatio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Vol. 1399, https://doi.org/10.1787/5a16beda-en.

Adalet McGowan, M. and D. Andrews (2015), "Skill Mismatch and Public Policy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1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5js1pzw9lnwk-en.

Aghion, P. et al. (2016), "Carbon Taxes, Path Dependency, and Directed Technical Change: Evidence from the Auto Indust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24, 1, pp. 1-51.

Albrizio, S., T. Kozluk and V. Zipperer (2017), "Environmental policies and productivity growth: Evidence across industries and firm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81, pp. 209-226, http://dx.doi.org/10.1016/j.jeem.2016.06.002.

Andrews, D., N. Deutscher, J. Hambur and D. Hansell (2020), "The Career Effects of Labour Market Conditions at Entry", OECD Productivity Working Papers, November 2020, No. 20, OECD Publishing, Paris.

Andrews, D., M. Adalet McGowan and V. Millot (2018), "Confronting the Zombies: Policies for Productivity Revival", OECD Economic Policy Papers, Vol. 21, https://doi.org/10.1787/f14fd801-en.

Andrews, D., C. Criscuolo and P. Gal (2016), "The Best versus the Rest: The Global Productivity Slowdown, Divergence across Firms and the Role of Public Policy", OECD Productivity Working Papers, No. 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63629cc9-en.

Andrews, D. and A. Saia (2017), "Coping with creative destruction: reducing the costs of firm exit",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Vol. 1353, https://doi.org/10.1787/bbb44644-en.

Andrews, D. and F. Cingano (2014), "Public Policy and Resource Allocation: Evidence from firms in OECD countries", Economic Policy, Vol. 74.

Andrews, D., C. Criscuolo and C. Menon (2014), "Do resources flow to patenting firms? Cross-country evidence from firm level dat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Vol. 1127, https://doi.org/10.1787/5jz2lpmk0gs6-en.

Arnold. D (2018), "The Impact of Privatis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on Workers", Industrial Relations Section Working Paper 625.

Autor, D. and E. Reynolds (2020), "The Nature of Work after the COVID Crisis: Too Few Low Wage Jobs", The Hamilton Project, Brookings Institution, Vol. 14.

Baker, S.R., N. Bloom, S. Davis and S.J. Terry (2020), "COVID-induced economic uncertainty", NBER Working paper no. 2698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oston.

Bambalaite, I., G. Nicoletti and C. Von Rueden (2020), "Occupational entry

regulations and their effects on productivity in services: Firm-level evidence", Vol.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1605, https://doi.org/10.1787/c8b88d8b-en.

Bargain, O. and U. Aminjonov (2020), "Trust and Compliance to Public Health Policies in Time of COVID-19", IZA discussion paper 13205.

Barlevi, G. (2002), "The Sullying Effect of Recession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9, no. 1, pp. 65-96.

Barrero, J., N. Bloom and S. Davis (2020a), "COVID-19 is also a reallocation shock",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2713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Barrero, J., N. Bloom and S. Davis (2020b), "Why Working From Home Will Stick", Becker Friedman Institute for Economics Working Paper, No. 2020-174, University of Chicago.

Bjorklund, A. and K.G. Salvanes (2010), "Education and Family Background: Mechanisms and Policies", NNH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14, http://dx.doi.org/10.2139/ssrn.1620398.

Blanchard, O., T. Philippon and J. Pisani-Ferry (2020), "A new policy toolkit is needed as countries exit COVID-19 lockdow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20-08, Washington, DC.

Bloom, N., S.J. Davis and Y. Zhestkova (2021), "COVID-19 shifted patent application toward technologies that support working from home ", Becker Friedman Institute Working Papers, No. 2020-133, University of Chicago.

Botev, J., B. Égert, Z. Smidova and D. Turner (2019), "A new macroeconomic measure of human capital with strong empirical links to productiv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7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12d7305-en.

Brodeur, A., I. Grigoryeva and L. Kattan (2020), "Stay-at-home orders, social distancing and trust", IZA Discussion Paper No. 13234.

Brown, J.D., J.S. Earle, S. Shpak and V. Vakhitov (2019), Is privatization working in Ukraine?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Palgrave Macmill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61, Issue 1, pp 1-35.

Botta, E. and T. Koźluk (2014), "Measuring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in OECD Countries: A Composite Index Approach",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Vol. No. 1177, https://doi.org/10.1787/5jxrjnc45gvg-en.

Caldera Sánchez, A., A. de Serres and N. Yashiro (2016), "Reforming in a difficult macroeconomic context: A review of the issues and recent literatur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Vol. 1297, https://doi.org/10.1787/5jlzgj45b3q0-en.

Caselli et al (2020), "The disproportionate impact of lockdowns on women and the young", VOX EU, accessed January 20, 2021.

Chateau, J., R. Bibas and E. Lanzi (2018), "Impacts of Green Growth Policies on Labour Markets and Wage Income Distribution: A General Equilibrium Application to Climate and Energy Policies",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13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a3696f4-en.

Chernoff, A.W. and C. Warman (2020), "COVID-19 and Implications for Automation",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2724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Chu, D., Y. Wu and W. Van den Broeck (2014), "Comparison of the Carbon Pricing Initiatives of British Columbia and Australia".

Ciriaci, D. (2014), "Business Dynamics and Red Tape Barriers", Economic Paper European Commission, Vol. 532.

Clayton, S. (2018), "The Role of Perceived Justice, Political Ideology, and individual or Collective Framing in Support for Environmental policies", Social Justice Research, Vol. 31, pp. 219-237.

Coady, D., I. Parry and B. Shang (2018), "Energy Price Reform: Lessons for Policymakers",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Vol. 12/2, pp. 197-219, http://dx.doi.org/10.1093/reep/rey004.

Coglianese, C., A. Finkel and C. Carrigan (eds.) (2013), Does Regulation Kill Job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Coysh, D. et al. (2020), "Vintage differentiated regulations and plant survival:

Evidence from coal-fired power plants", Ecological Economics, Vol. 176, p. 106710, http://dx.doi.org/10.1016/j.ecolecon.2020.106710.

CRED-UNDRR (2020), "Human Cost of Disasters: An overview of the last 20 years - 2000-2019",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RED), University of Louvain, Belgium, in partnership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Geneva.

Criscuolo, C. et al. (2021), "The firm-level link between productivity dispersion and wage inequality: A symptom of low job mobi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CSO Equity Review (2019), "Can Climate Change Fuelled Loss and Damage Ever be Fair?", CSO Equity Review Coalition, https://doi.org/10.6084/m9.figshare.10565549.

Cunningham, C., F. Ederer and S. Ma (2018), "Killer Acquisitions", SSRN Electronic Journal, http://dx.doi.org/10.2139/ssrn.3241707.

Cunha et al (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NBER Working Paper No. 11331, Boston.

D' Arcangelo, F.M., (2020), "Environmental Policy and Investment Location: The Risk of Carbon Leakage in the EU ETS", Essays in Environmental Econmics: Carbon Markets, Competitiveness and Common Pool Resources, University of Toulouse.

Davis, S. and T. von Wachter (2011), "Recessions and the Costs of Job Loss",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Vol. 43/2, pp. 1-72.

Dechezleprêtre, A., T. Kruse and C. Berestycki (2021), "Measuring and Assess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icy Uncertainty",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Paris.

Dechezleprêtre, A., D. Nachtigall and B. Stadler (2020), "The effect of energy prices and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on manufacturing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Sector- and firm-level evidenc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62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899eb13f-en.

Dechezleprêtre, A. et al. (2019), "Do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 Go

Together? A Review of Micro-level Empirical Evidence from the Past Decade or So", International Review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Vol. 13/1-2, pp. 1-118, http://dx.doi.org/10.1561/101.00000106.

Decker, R. et al. (2020), "Changing Business Dynamism and Productivity: Shocks versus Responsivenes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10/12, pp. 3952-90, http://dx.doi.org/10.1257/aer.20190680.

De Fraja, G., S. Lemos and J. Rockey (2017), "The Wounds That Do Not Heal. The Life-time Scar of Youth Unemployment", CEPR Discussion Papers No. 11852,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London.

Demmou L. and G. Franco (2020), "Do sound infrastructure governance and regulation affect productivity growth? New insights from firm level dat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160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10535403555.

Deng, Y., Y. Wu and H. Xu (2020), "Political Connections and Firm Pollution Behaviour: An Empirical Study",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Vol. 75, pp. 867-898, https://doi.org/10.1007/s10640-020-00410-7.

Douenne, T. and A. Fabre (2020), "Yellow Vests, Pessimistic Beliefs, and Carbon Tax Aversion".

Dube, A. (2019), Making the Case for a Higher Minimum Wage, Milken Institut Review.org.

Duval, R., D. Furceri and J. Jalles (2020), "Job protection deregulation in good and bad times", Oxford Economic Papers, Vol. 72/2, pp. 370-390, https://doi.org/10.1093/oep/gpz043.

Duval, R., J. Elmeskov and L. Vogel (2007), Structural Policies and Economic Resilience to Shock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https://doi.org/10.1787/140152385131.

EBRD (2020), Transition Report 2020-2021,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London.

ECB (2020), "The long-term effects of the pandemic: insights from a survey of leading companies", ECB Economic Bulletin, Issue 8/2020, European Central

Bank, Frankfurt.

Egert et al (2019), « Policy drivers of human capital in the OECD' s quantification of structural reform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76, OECD Publishing.

Egert B. (2017), "Regulation, institutions and productivity: New macroeconomic evidence from OCE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354, OECD Publishing, Paris.

Fletcher, A. (2016), "The role of demand-side remedies in driving effective competition" ,http://www.regulation.org.uk/library/2016-CCP-Demand_Side_Remedies.pdf.

Forni, L., A. Gerali and M. Pisani (2010), "Macroeconomic Effects of Greater Competition in the Service Sector: the case of Italy", Macroeconomic Dynamics, pp. 1-32.

Gopinath, G. et al. (2017), "Capital Allocation and Productivity in South Europ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32/4, pp. 1915-1967.

Gupta et al. (2014), "Efficiency-adjusted public capital and growth", World Development, Vol. 57. Pp. 164-178, May.

Harring, N. and S. Jagers (2013), "Should We Trust in Values? Explaining Public Support for Pro Environmental Taxes", Sustainability, Vol. 5/1, pp. 210-227, http://dx.doi.org/10.3390/su5010210.

Henderson, R. (1993), "Underinvestment and Incompetence as Responses to Radical Innovation: Evidence from the Photolithographic Alignment Equipment Industry",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24/2, pp. 248-270.

Heckman, J.J., J. Stixrud and S. Urzua (200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u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urs", NBER Working Paper, No. 1200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Hermansen, M. (2019), "Occupational licensing and job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Vol. 1585, https://doi.org/10.1787/4cc19056-en.

Hershbein, B. and L.B. Kahn (2018), "Do Recessions accelerate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Evidence from Vacancy Post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108 (7): pp. 1737-72.

Hsu, S., J. Walters and A. Purgas (2008), "Pollution Tax Heuristics: An Empirical Study of Willingness to Pay Higher Gasoline Taxes", Energy Policy, Vol. 36/9, pp. 3612-3619, http://dx.doi.org/10.1016/j.enpol.2008.06.010.

IEA (2021), Global Energy Review: CO2 Emissions in 2020, IEA, Paris https://www.iea.org/articles/global-energy-review-co2-emissions-in-2020

IEA (2020), Sustainable Recovery,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aris, https://www.iea.org/reports/sustainable-recovery.

IEA (2016), World Energy Outlook 201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aris, https://dx.doi.org/10.1787/weo-2016-en.

IMF (2020a),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Bridge to Recover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IMF (2020b), "Tax Policy for Inclusive Growth after the Pandemic", Fiscal Affairs - Special Series on COVID-19, December 16, 202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IMF (2015), Making Public Investment More Efficient, Staff Repor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Jaimovich, N. and H. Siu (2020), "Job Polarization and Jobless Recove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102, issue 1, pp. 129-147.

Judge (2019), Social renting: a working hypothesis, Resolution Foundation, accessed on 15 January 2021.

Jones, C. and C. Tonetti (2020), "Nonrivalry and the Economics of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10/9, pp. 2819-2858, http://dx.doi.org/10.1257/aer.20191330.

Karahan, F. et al. (2017), "Do Job-to-Job Transitions Drive Wage Fluctuations over the Business Cycle? ",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7/5, pp. 353-57, http://dx.doi.org/10.1257/aer.p20171076.

Klenert, D. and L. Mattauch (2019), "Carbon Pricing for Inclusive Prosperity: The Role of Public Support", EFIP Policy Brief, No. 16.

Klenert, D. et al. (2018), "Making carbon pricing work for citizens", Natural Climate Change, No. 8, pp. 669-677.

Kozluk, T., Paciorek. A, and J. Strasky (2021); When do countries reform? Insights from Going for Growth and proposals for future work,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forthcoming).

Leichenko, R. and J. Silva (2014), "Climate Change and Poverty: Vulnerability, impacts and alleviation strategies",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No. 5, 10.1002/wcc.287.

Levinson, A. (2019), "Energy Efficiency Standards Are More Regressive Than Energy Tax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sts, Vol. 6, No. S1.

Marin, G. and F. Vona (2019), "Climate policies and skill-biased employment dynamics: Evidence from EU countrie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98, pp. 1022-53, http://dx.doi.org/10.1016/j.jeem.2019.102253.

OECD (2021a), "Fostering economic resilience in a world of open and integrated markets: Risks, vulnerabilities and areas for policy action", forthcoming.

OECD (2021b), "The role of online platforms in weathering the COVID-19 shock",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1c) Effective Carbon Rates 2021. Document accompanying the update of the effective carbon rates database. (COM/ENV/EPOC/CTPA/CFA(2020)4/REV1)

OECD (2020a), Employment Outlook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OECD Publishing, Paris.OECD (2020b), COVID-19 and global value chains: Policy options to build more resilient production network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c),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9a88ab1-en.

OECD (2020d), OECD Economic Surveys: Germany 2020,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e), G20 report on New Horizon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f), COVID-19 and the low carbon transition: Impacts and possible policy response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g), "Protecting people and societie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h), Productivity gains from teleworking in post-COVID era,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i),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20 Measuring Progress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6b007cd-en.

OECD (2020j), Health at a Glance: Europe 2020 – State of Health in the EU Cycl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2129230-en.

OECD (2020k), Who cares? Attracting and Retaining Care Workers for the Elderl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2c0ef68-en.

OECD (2020l), "Beyond Containment: Health systems responses to COVID-19 in the OECD",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m), "Issue Note 4: Distributional risks associated with non-standard work: Stylised facts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Issues notes on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COVID-19 outbreak,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n), "What have platforms done to protect workers during the coronavirus (COVID-19) crisi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o), "Biodiversity and the economic response to COVID-19: Ensuring a green and resilient recovery",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p), "Transparency, communication and trust: The role of public communication in responding to the wave of disinformation about the new Coronaviru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q), "Roundtable on Conglomerate Effects of Mergers - Background

Note", Background note for the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Competition Committee.

OECD (2020r), Abuse of Dominance in Digital Market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s), "Insolvency and debt overhang following the COVID-19 outbreak: Assessment of risks and policy response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t), Climate Policy Leadership in an Interconnected World: What Role for Border Carbon Adjustment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u), Schooling Disrupted, Schooling Rethought: How the COVID-19 pandemic is changing education,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9a), Economic Policy Reforms 2019: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9b),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9c), "Changing the way forward for digital competition policy", OECD On the level, https://oecdonthelevel.com/2019/12/02/charting-the-way-forward-for-digital-competition-policy/.

OECD (2019d), OECD Skills Outlook 2019: Thriving in a Digital World,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9e), OECD Skills Strategy 2019: Skills to Shape a Better Futur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8a), Effective Carbon Rates 2018: Pricing Carbon Emissions Through Taxes and Emissions Trad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5304-en.

OECD (2018b), "Quality considerations in digital zero-price markets", Background note for the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Competition Committee.

OECD (2018c),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8d), Stemming the Superbug Tide: Just a Few Dollars More,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7a),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7b),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ll: Overcoming Inequality throughout the Life Couse,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7c), Economic Policy Reforms 2017: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5a), The Future of Productiv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48533-en.

OECD (2015b), Economic Policy Reforms 2015: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5c), Policy Guidance for Investment in Clean Energy Infrastructure: Expanding Access to Clean Energy for Green Growth and Develop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12664-en.

OECD (2013),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1), Future Global Shocks – Improving Risk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0), Tax policy reform and economic growth, OECD Tax Policy Studies, No.20 OECD Publishing, Paris.

Ollivaud, P. and D. Turner (2014), "The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OECD Potential Output",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16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8151973.

Popp, D., F. Vona, G. Marin and Z. Chen. (2020), "The Employment Impact of Green Fiscal Push: Evidence from the American Recovery Act",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2732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Psacharopoulos et al (2020), "Lost wages: The COVID-19 Cost of school closures," Discussion Paper Series, No. 13641,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Bonn.

Rozenberg and Fay (2019), Beyond the gap: How countries can afford the infrastructure they need while protecting the planet, Sustainable Infrastructure, Washington, D.C. World Bank.

von Rueden, C. and I. Bambalaite (2020), "Measuring occupational entry regulations:

A new OECD approach",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Vol. No. 1606, https://doi.org/10.1787/18151973.

Sibley, C. and T. Kurz (2013), "A Model of Climate Belief Profiles: How Much Does It Matter If People Question Human Causation?",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Vol. 13/1, pp. 245-261, http://dx.doi.org/10.1111/asap.12008.

Topel, R. and M. Ward (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2, pp. 439-479.

Schwartz et al (2020), Well Spent: How Strong Infrastructure Governance Can End Waste in Public Invest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Van Dender, K. and J. Teusch (2020), "Making environmental tax reform work", La Revue des juristes de Sciences Po, 18, pp. 106-112, Paris.

Vona, F. (2019), "Job Losses and Political Acceptability of Climate Policies: Why the 'Job-Killing' Argument is So Persistent and How To Overturn It", Climate Policy, Vol. 19/4, pp. 524-532, https://doi.org/10.1080/14693062.2018.1532871.

Vona, F., G. Marin, D. Consoli and D. Popp. (2018),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Green Skills: An Empirical Explor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sts, Vol. 5/4, pp. 713-753, http://dx.doi.org/10.1086/698859.

Walker, W. (2013), "The Transitional Costs of Sectoral Reallocation: Evidence From the Clean Air Act and the Workfor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8/4, pp. 1787-1835, http://dx.doi.org/10.1093/qje/qjt022.

Walker, R. (2011),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Labor Reallocation: Evidence from the Clean Air Ac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1/3, pp. 442-447, http://dx.doi.org/10.1257/aer.101.3.442

WHO (2010) https://www.who.int/hrh/migration/code/code_en.pdf?ua=1